

2023 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4. 5.

국회환경노동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구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7
7.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환경부 소관	12
2) 고용노동부 소관	24
3) 기상청 소관	38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39
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40
2) 고용노동부 소관	107
3) 기상청 소관	176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184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23. 10. 10(화) ~ 10. 27(금) [1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 총 75개 기관	
<p>1. 환경부 가. 본부 나. 소속기관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 국립환경과학원 (3) 국립생물자원관 (4) 국립환경인재개발원 (5) 화학물질안전원 (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7)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8)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9) 한강유역환경청 (10) 낙동강유역환경청 (11) 금강유역환경청 (12) 영산강유역환경청 (13) 수도권대기환경청 (14) 원주지방환경청</p>	<p>다. 산하 공공기관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APEC 기후센터 (3)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p> <p>3. 고용노동부 가. 본부 나. 소속기관 (1)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2) 최저임금위원회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p>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 총 75개 기관

- (15) 대구지방환경청
 - (16) 전북지방환경청
 - (17) 한강홍수통제소
 - (18) 낙동강홍수통제소
 - (19) 금강홍수통제소
 - (20) 영산강홍수통제소
- 다. 산하 공공기관
- (1) 한국수자원공사
 - (2) 한국환경공단
 - (3) 국립공원공단
 -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6) 국립생태원
 - (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8) 한국상하수도협회
 - (9) 한국환경보전원
 - (10) 수자원환경산업진흥
 - (1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1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 기상청

가. 본 부

나. 소속기관

- (1) 수치모델링센터
- (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3) 수도권기상청
- (4) 부산지방기상청
- (5) 광주지방기상청
- (6) 강원지방기상청
- (7) 대전지방기상청
- (8) 대구지방기상청
- (9) 제주지방기상청
- (10) 국가기상위성센터
- (11) 기상레이더센터
- (12) 국립기상과학원
- (13) 항공기상청

-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다. 산하 공공기관

- (1) 근로복지공단
-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3) 한국산업인력공단
-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5) 한국고용정보원
- (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8) 노사발전재단
- (9) 건설근로자공제회
-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1) 한국잡월드
- (1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 감사반의 구성

가. 편성원칙

감사반의 편성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전원(15인)을 단일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나. 감사반

감사반장	박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	이수진 위원 김영진 위원 노웅래 위원 우원식 위원 윤건영 위원 이학영 위원 전용기 위원 진성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위원 김형동 위원 박대수 위원 이주환 위원 지성호 위원	국민의힘
	이은주 위원	비교섭단체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월 11일(수)	10:00	환경부	국회	
10월 12일(목)	10:00	고용노동부	국회	
10월 13일(금)		자료정리		
10월 14일(토)~15일(일)		공휴일		
10월 16일(월)	10:00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회	
		현장시찰	김포국제공항	
10월 17일(화)	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국회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월 18일(수)		자료정리		
10월 19일(목)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국회	
10월 20일(금)	미정	현장시찰	경북 예천 (수해지역)	출장

일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월 21일(토)~22일(일)		공휴일		
10월 23일(월)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회	
10월 24일(화)	10:00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회	
10월 25일(수)		자료정리		
10월 26일(목)	10:00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종합감사
10월 27일(금)	10:00	환경부 기상청	국회	종합감사

6.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환경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6	6	12
출 석	5	6	11
불 출 석	1	-	1

【고용노동 분야】

(단위 : 인)

구 분	증 인	참고인	계
출 석 요 구	21	11	32
출 석	13	11	24
불 출 석	8	-	8

일반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2023. 10. 11. 환경부 본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3명)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원폐수의 불법 재이용	
	산디판 차크라보 티	쿠팡 CPLB 대표	생활용품 판매 관련	
	조성국	노루페인트 대표이사	환경부·업계가 협약한 유성 도료 사용금지를 어기고, 계속하여 유통·사용	X
참고인 (2명)	최동진	기후변화행동 연구소 소장	물관리 정책	
	강대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	대기 측정 업무	

■ 2023. 10. 12. 고용노동부 본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7명)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문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이사	마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문제 및 무대책, 교섭해대 등	
	마창민	DL E&C 대표이사	건설분야 중대재해 8건 연이은 발생 등에 대한 무대책 문제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문제	X
	박영진	더케이텍 대표	직장내괴롭힘	
	김왕배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장내괴롭힘	X
	차승열	KCC ESH 위원장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중대재해 발생 관련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참고인 (4명)	김동준	코스트코 사망자 친형	코스트코코리아의 유족 대책 등 문제점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중대재해 대책 문제 및 노조탄압 등 문제	
	남선일	배달라이더	고객 갑질 및 산재 피해자	
	000 (비공개이름)	트레이너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	

■ 2023. 10. 17.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구분	성 명	직 책(직업)	신 문 요 지	출석
증 인 (6명)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	중대재해 및 사회적약속 불이행 문제	
	손창호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대표	한진 평택 컨테이너터미널 불법파견 등	
	프란츠 호튼	페르노리카코리아 대표	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히가시우 라미치나 오	(주)가네보코스메틱코리아 대표	직장내괴롭힘 등	
	김벌리린 창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국내중소기업 파산 문제	X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대규모 임금체불 대책	X
참고인 (4명)	김철	노조위원장	게임업계 고객 폭언 등 갑질문제	
	이국균	평택항일반노조 위원장	한진 평택 컨테이너터미널 불법파견 등	
	이강호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조위원장	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유철환	안동시청 공무원 (지방시설7급)	상급단체탈퇴	

■ 2023. 10. 19. 환경부 소속기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참고인 (1명)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페플라스틱 등 폐기물 처리 관련 업계 입장 확인	

■ 2023. 10. 23.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참고인 (1명)	문석영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동료지원가	해당 사업 예산삭감 및 폐지에 따른 문제	

■ 2023. 10. 26.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종합감사)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8명)	조익서	오티스엘레베이터 대표	승강기 안전사고 무대책 문제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	대규모 구조조정과 퇴직비용	X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노동실태	
	허영인	SPC 회장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문제	X
	이해욱	DL그룹회장	건설분야 중대재해 8건 연이은 발생 등에 대한 무대책 문제	X
	홍용준	쿠팡 CLS 대표	쿠팡 노동환경 개선 문제	
	김왕배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장내 괴롭힘	X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대규모 임금체불 대책	
참고인 (2명)	방규현	오티스엘레베이터 노조위원장	승강기 안전사고 무대책 문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노동실태	

■ 2023. 10. 27. 환경부 및 기상청(종합감사)

구분	성명	직책(직업)	신문요지	출석
증인 (3명)	조범준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	법정보호종 산양 서식 여부 확인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 문제	
	배상윤	영풍석포제련소장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관련	
참고인 (3명)	고장수	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일회용품 저감대책 관련	
	성은경	주부	마포구 소각장 추가 건설로 주거환경 악화 문제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관련	

7. 주요 감사 실시내용

1) 환경부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 환경부 본부 ◀</p>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및 방사성 물질 관련(2)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대응 문제(3) 수거된 라돈침대에 대한 처분 방안 마련 및 역학조사 실시 필요(4)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준수 필요(5)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前 감사관 조사 요구(6) 환경부장관의 균형 있는 업무 추진 노력 필요(7) 환경정보네트워크 사이트 정비 필요(8) 국립환경과학원 조직개편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녹색전환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1) 환경교육 강사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2) 녹색기업 지정 취소 기준 개선 필요(3) 시멘트 제품에 대한 친환경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한 필요(4)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5)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6) 석포제련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7) 통합허가 대상의 확대 필요(8) 통합허가 사업장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필요(9) 목분 재활용 기술의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승인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자연보전 부문】

- (1) 일본에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요구 필요
- (2)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3)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4) 내성천 일대의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필요
- (5)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방식의 개선 필요
- (6) ASF 광역울타리 사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필요
- (7) 한강 밤섬에서 발견된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조치 필요
- (8) 공주보 지점 멸종위기 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9) 떼까마귀로 인한 피해 예방과 공존 방안 및 조류 이동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10) 야생동물 대체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점검 필요
- (11)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필요
- (12)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 필요
- (13)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 필요
- (14) 불법적인 전기울타리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5)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제도 예산 삭감에 대한 검토 필요
- (16) 산불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17) 국립공원의 임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 (18) 습지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자원순환 부문】

- (1) 현수막 폐기물 재활용 및 발생억제 방안 마련 필요
- (2)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및 생분해 제품의 분리배출 대책 마련 필요
- (3) PB산업의 목분 사용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4)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5) 폐기물 성·복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6) 시멘트 업체의 반입 폐기물 관리 방식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 (7) 시멘트 중금속 법적기준 마련 관련 구체적 계획 마련 필요
- (8) 시멘트 업계의 더스트 관리방안 마련 및 불법 매립 업체 고발 필요
- (9) 자원순환의 기준 재정비 필요
- (10)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인근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1) 폐납산 배터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12) 납 재활용 공장과 인근 지역의 공기 중 납 농도에 대한 지도·점검 필요
- (13) 전기차 배터리 회수 방안 및 배터리 재활용과 산업화 방안 마련 필요
- (14) 고형 연료 품질검사 방식 및 처분 방식의 개선책 마련 필요
- (15) 폐기물 열분해 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16) 일회용품 저감 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17) 방치폐기물 매립장 발생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19)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처벌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물관리 부문】

- (1) 4대강 녹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2) 전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특혜 논란에 대한 조사 필요
- (3)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4) 지방의 상수도 보급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5) 내성천 홍수 피해 대책 마련 필요
- (6)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예측 개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7)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관련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의 절차적 타당성 검토 필요
- (8) 먹는 물의 방사능 물질 관리 방안의 개선 필요
- (9) 저수지 관리 개선 필요
- (10) 상수원의 오염원 관리 필요
- (11) 신규 댐 건설 계획 관련
- (12) 국가 수질자동측정망 측정 장비 사업 중단 관련 조사 필요
- (13)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공시 자료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정치에 대한 점검 필요
- (14) 상수도관망 세척사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15) 빗물이용시설 관리 개선 필요
- (16)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관련 위법성 시정 필요
- (17) 도시침수발생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실집행 및 입찰 적정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8) 조류경보제 개선 필요
- (19)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 필요
- (20)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총액계상사업 편성 필요
- (21)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토양안전성 분석 결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22)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잔존 슬러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기후 부문】

- (1)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재설정 및 목표달성 방안 마련 필요
- (2) 탄소 포집 이용 및 저장(CCUS)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3) CF100 추진의 문제점 검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4) 탄소중립 목표 달성 수단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 필요
- (5)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재설정 등 적극적인 역할 노력 필요
- (6) 배출권거래제 초기 할당량과 취소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환경보건 부문】

- (1) 가습기 살균제와 살균필터의 실질적 차이점 확인 및 분담금 부과 제외 결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 가습기 살균필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 (3)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확인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4) 석면 해체작업 관련 관리감독 강화 필요
- (5)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화학물질관리협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6)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 및 전담 치료기관 설립 등 검토 필요
- (7)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옥시의 추가 납부 거부 공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 (8)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및 환경개선 예산 확보 필요
- (9) 정확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철거 계획 마련 필요
- (10) 석면 건축물 중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11) 부적절하게 운영된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 해지 검토 필요
- (12)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13) 유해성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필요성 검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14) 아로마오일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대기보전 부문】

- (1) 대기오염 측정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사후관리 필요
- (2) 전기화물차의 성능 비례 보조금 지급 및 충전 인프라 개선 필요
- (3)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4)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5)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조속한 구축 필요
- (6) 공공·민간 전기차 완속충전기 관련 요금 체계 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
- (7) LPG 화물차 구매보조금 폐지 유예 방안 검토
- (8) 조리흡 유해성평가와 공정시험법 마련 필요
- (9) 유증기 환기·저감시설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10)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과 측정인 시스템 간 연계 방안 마련
- (11)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초과 가스냉난방기(GHP)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2) 라돈 측정 대상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1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필요
- (14) 도로 청소차에 대한 성능 검증 방안 마련 필요
- (15) 친환경도료 의무 사용률 기준 유예에 따른 형평성 보완 방안 마련 및 제품 검사 필요

【소속·산하기관 공통사항】

- (1) 산하기관 및 관련 협회의 성과급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2) 먹는 물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3) 공사가 진행 중인 홍수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4) 화학물질관리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준수여부 관리감독 강화 필요
- (5) 파크골프장의 불법 조성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6) 재해예방 관련 법정의무이행사항 점검 철저 필요
- (7) 야생동물 대체서식지에 대한 실질적인 현지 확인 및 점검 필요
- (8)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9) 드림파크 골프장에 대한 조사 필요
- (10) 고품 연료 생산의 낮은 경제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1) 특정도서에서의 야영·조리 행위 금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및 과태료 부과 필요
- (12)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 (13) 유역환경청의 재해 예방 관련 법정의무이행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1) 홍수관리구역 농토의 수해 보상 대책 마련 필요

▶ 국립환경과학원 ◀

- (1) 염지하수와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생산된 먹는 물의 감시항목에 방사능 관련 사항 지정 필요
- (2) 하천·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 마련 필요
- (3)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4) 라돈 저감장치 확보방안 마련 필요
- (5) 가습기용 항균부품인 원통형 장착 필터에 대한 성분 확인 필요
- (6) 방사능 물질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규정 준수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7) 대기오염물질 측정 장비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및 도입 결정까지의 합리성 재검토 필요
- (8)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추진 필요
- (9) 적절한 현안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 검토 필요

▶ 국립생물자원관 ◀

- (1) 집비둘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강유역환경청 ◀

- (1)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낙동강유역환경청 ◀

- (1)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재검토 및 반려 필요
- (2) 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참여 제한 필요
- (3) 금호강 보도교 사업 중단 및 팔현습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건의 검토 필요
- (4) 낙동강 보 구간의 메탄 발생 기전에 대한 연구 필요

▶ 금강유역환경청 ◀

- (1)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강화 및 사고대응체계 개선 필요
- (3) 납 배출 업체에 대한 민원 검토 및 관리 강화 필요

▶ 원주지방환경청 ◀

-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동의에 관한 감사 필요성 검토

주요 감사 실시내용

필요

- (2) 쌍용 C&E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대구지방환경청 ◀

- (1)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감독 강화 필요
- (2)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과 조사방법의 다양화 필요
- (3) 내성천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조치 필요
- (4)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철저한 구성 및 운영 필요
- (5)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 완료 합의에 대한 검토 필요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 (1) 특혜성 연구용역 발주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실시 필요
- (2) 미사부하량 데이터 업데이트 연구 계획 수립 필요

▶ 금강홍수통제소 ◀

- (1) 홍수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

- (1) 안동댐 녹조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2) 길안천 건천화 문제의 해결방안 연구 필요
- (3) 관로 불법매설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필요
- (4) 환경분쟁 예방 교육 참여 및 분쟁 저감 방안 마련 필요
- (5) 장기적 관점의 물관리 계획 수립 필요
- (6) 성과목표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 (7) 영산강과 섬진강 도서 지역의 가뭄 시 먹는 물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8) 반도체 사업을 위한 용수 공급 확대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9) 건설폐기물법 준수 노력 필요
- (10) 대청댐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침수 피해 발생 원인 파악 필요
- (11) 시화호 발전 방안 마련 및 시화호 성공사례 홍보 필요
- (12) 보를 이용한 가뭄·홍수 대응능력에 대한 근거 제시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13) 손실 발생 해외사업에 대한 대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수익창출 방안 마련 필요
- (14) 조직 기강 확립 및 관리 노력 필요
- (15)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적극적 시행 필요
- (16) 노후관 개량 사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17) 4대강 16개 보의 경제성 재검토 필요
- (18) 경인아라뱃길 운영 문제

▶ 한국환경공단 ◀

- (1)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할 필요
- (2)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실태 파악 및 환경공단 측정인 시스템과 환경부 SEMS 간 연계방안 마련 필요
- (3) 악취저감 컨설팅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4) 흡입독성시험 시설과 성분분석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 확보 노력 필요
- (5)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탄소중립포인트의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6) 촉탁직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7)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등급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필요
- (8) 수소차 충전소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9) 이웃사이센터 운영주체 일원화에 따른 인력 충원 방안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국립공원공단 ◀

- (1)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권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 (2) 특수산악구조대 인력 증원 및 추가 배치 필요
- (3) 국립공원 탐방로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어매트 철거 필요
- (4) 해양탄소흡수원 복원 전략의 점검 필요
- (5) 국립공원 내 임도의 필요성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6)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에 대한 입장 명확화 필요
- (7) 국립공원 내 민가 지원 사업 개선 필요
- (8) 국립공원 내 잔디 주차장 설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의 인사청탁 및 특혜 논란에 대한 조사 요구
-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 (3) 골프장 운영관리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이행 필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1)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2) 비목재 종이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개선 마련 필요
- (3) 비목재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4)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보완 노력 필요
- (5) 용자 심사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체계 마련 필요
- (6) 친환경 제품의 과장·거짓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제품 리콜 실시 검토 필요
- (7)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8)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국립생태원 ◀

- (1) 자연자본 정보공시의 이행력 증진 방안 마련 필요
- (2) 유기·방치 야생동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3)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규정 개정안 재검토 필요
- (4) 아르헨티나 개미에 대한 선제적 조사 필요
- (5) 한강 밤섬 내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및 습지조사 결과의 조속한 제출 필요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 (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사무실과 실험실 분리 조치 필요

▶ 한국상하수도협회 ◀

- (1) 성과급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환경보전협회 ◀

- (1) 환경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고용노동부 본부 ◀

【공통사항】

- (1)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5곳)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
- (2) 독립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전문성 강화 필요
- (3) 고용노동부 본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4)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출신 직원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사상 차별 해소 필요
- (5)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기계양 실태 관리 필요
- (6) 산업안전감독관의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 지급 방안 마련
- (7)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처우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8)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점검 필요
- (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필요
- (10)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대한 감사·감독 실시
- (11) 고용노동부 직원의 음주운전·성범죄 관련 비위행위 근절 대책 마련 필요

【고용 부문】

- (1)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선 필요
- (2)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편 방안 마련 필요
- (3) 보험사기 근절 등 고용보험기금의 엄격한 관리 필요
- (4) 복수직업종사자(소위 “N잡러”) 보호를 위한 부분실업급여제도 도입,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의 검토 필요
- (5) 외국인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관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 (6) 외국인력 통합평가·관리 계획 수립 등 외국인력 정책의 범정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차원 통합관리 필요
- (7) 위법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 합리화 필요
 - (8)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거주여건 및 인권보호 방안 점검 필요
 - (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10) 고용평등상담실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의 지방고용노동청 이관 재검토 필요
 - (11) 고용평등상담실 업무의 지방고용노동청 이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12) SNS상의 부업 사기 방지 및 대응 방안 마련
 - (13) 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장 점검 및 단속 필요

【노동 부문】

- (1) 표준계약서 정비 등 보조출연자 불공정 계약 개선 필요
- (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3) 민간지방자치단체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자 확대 필요
- (5)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강화 필요
- (6)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 배달 임금제 도입 방안 마련 필요
- (7) ‘새벽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규율 필요
- (8) 직장 내 갑질센터 관련 사업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관에 따른 인력 충원 등 필요
- (9) 노동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필요
- (10)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1) 코스트코 근로자 사망 사건 이후 근로환경 개선 조치 감독 필요
- (12) 코스트코의 단체교섭 회피 등 조사 필요
- (13) 노사 자율·자치의 원칙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최소화 필요
- (14) 개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탈퇴 권리 보장 등 정당한 노조활동 지원 필요
- (15)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시정 필요
- (16) 에스프로 도입 등 조선사의 상생협약 이행 독려 필요
- (17) 노동조합의 정치과업 등에 대한 엄정 대처 필요
- (18)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 접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19) 불합리한 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에 대한 지도 필요
- (20) 노동조합법 제2조와 관련하여 사용자성 확대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
- (21)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관리 필요
- (22) 공무원 노조의 비교섭사항에 대한 편법적인 단체협약 체결 시도에 대한 조치 필요
- (23)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지침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필요
- (24)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에 노동조합 포함 방안 마련 필요
- (25) 공공기관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관련 전수조사 및 위법사항 고발 필요
- (26) 노사 자율권에 기반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감독 필요
- (27)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 필요
- (28) 위법 소지가 있는 취업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필요
- (29)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30) 생활체육업계의 부당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31) 정부의 임금체불 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32) 상습체불 근절 등 임금체불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33) 간호인력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기획근로감독 등 실시 필요
- (34) 조선업 분야에서의 E-7 비자 입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하한선 회피 사례 예방 방안 마련 등 필요
- (35)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 확장 및 직장문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6)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37) 국토교통부와와의 협의를 통한 택시 증차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38) 한국대학교육협회의 1년 단위 직원 고용 계약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 필요
- (39) LH 건설 사업장의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행위 사례 전수조사 및 시정조치 실시
- (40) (주)정법시대 등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41) 현대자동차의 외근 영업사원에 대한 도촬 행위 노동법 위반 여부 검토 필요
- (42) 고객 등에 의한 폭언 등으로부터 게임업계 종사자 보호 방안 강구 필요
- (43) 민원인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에 대한 조사 필요

【산업안전보건 부문】

- (1) SPC, DL이앤씨 등 반복적인 산재 발생 사업체에 대한 관리감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독 강화 필요
- (2) 고객 등으로부터 배달라이더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3)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 필요
 - (4)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관할 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 중단 등에 대한 조사 등 조치 필요
 - (5) 구광 물류센터 온열질환 발생 관련 정부의 관리감독체계 재점검 등 대책 마련 필요
 - (6)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산재를 독립된 직업병으로 분리·관리하는 방안 마련 필요
 - (7)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고용노동부 제재처분 회피 사례 조사 및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8) 온열질환에 따른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필요
 - (9) 건설현장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갈탄, 숯탄 등 사용 금지 필요
 - (10) 건설현장 폭염·혹한 대비 장치 설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필요
 - (11)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준비 필요
 - (12) 2023년 8월 야니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엄정 수사 필요
 - (13)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 확대 필요
 - (14)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필요성 검토 필요
 - (15) 민간 건설현장에서의 TBM(Tool Box Meeting)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16) 산재 역학조사 지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필요
 - (17) 산재 판정 기준에 규범적 인과관계 명시, 산재 조사기한 설정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등 산재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18) 코스트코 사망 사고에 대한 초동 조사 지연에 대한 관련자 징계 조치 필요
 - (19) 코스트코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필요
 - (20) 산업단지 내 공동휴게실 설치 사업 적극 추진 필요
 - (21)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 필요
 - (2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23) 유해인자 인정 범위 확대 등 태아산재 도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4) 세아베스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25) 양대노총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 배제 철회 필요
 - (26) 산재 직영병원의 장기 요양환자 관리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 이행 필요
 - (27)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하위규정 구체화 필요
 - (28) 쿠광의 산업재해 은폐 사건의 형벌 사항 해당 여부 조사 필요
 - (29)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과킨슨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재검토 필요
 - (30) 쿠광CLS 소속 킥플렉서 사망사건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 조사·감독 실시 필요
 - (31) 승강기 노동자 근로환경 조사 및 현장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32) 산재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산재 관련 직원 증원 필요
 - (33) 기업의 자발적인 작업중지 실시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 간 건설현장 안전관리

주요 감사 실시내용

에 관한 명확한 업무 영역 설정 필요

- (35) 5인 미만 농업 사업장의 농업인 산재보험 적용 필요
- (36) 산재원인 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수사와 원인조사의 분리 등 제도 개선 방안 강구 필요
- (37) 불합리한 산재 불인정 결정 방지를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 필요
- (38)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인정 및 예방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39) 콜센터의 재해 예방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 필요
- (40) 쿠팡의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참여 유도 필요
- (41) 영세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지원 필요
- (4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래전문기술원 설립을 위한 수도권 건물 매입에 대한 엄정한 조치 필요

【통합고용·청년고용 부문】

- (1)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축소에 대한 재검토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확대 필요
- (3)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수립 필요
- (4) 장애인고용컨설팅업체의 위법행위 조사·점검 필요
- (5)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재검토 필요
- (6)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축소에 대한 재검토 필요
-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필요
- (8) 근로자의 자유로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 (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 필요
- (10) 경북 북부 지역 중장년내일센터 설치 검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직업능력 부문】

- (1) 물류직종 직업훈련 현장실습장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중앙노동위원회 ◀

- (1) 권리구제대리인제도 이용률 및 권리구제율 제고 방안 마련
- (2)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 기준 필요
- (3) 전공노와 지부 간 탈퇴 문제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중노위의 적극적인 감독 필요
- (4)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조치 필요
- (5)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기관감사 실시 필요
- (6) 노동위원회 중립성 보호를 위한 신중한 언행 필요
- (7)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8)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판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 ◀

- (1) 사회통합 등 최저임금의 기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필요
- (2) 단일화된 최저임금 체계 및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필요
- (3) 최저임금 결정의 독립성 제고 필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요 감사 실시내용

시행하고, 국회에 보고 후 미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1) 방송 장악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재조사 필요
- (2) 서울교통공사의 부당한 타임오프제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문제해결방안 마련 필요
- (3)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노사 분쟁에서 노동청의 적극적 중재 역할 필요
- (4) 가네보코스메틱 코리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 실시 필요
- (5)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중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6) LG디스플레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1)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체불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필요
- (2) 대유위니아 회장의 직접적인 기업경영 관여 상황을 고려한 임금체불 사건 수사 필요
- (3) 군포 쿠팡 킥플렉서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 (4) 하남 코스트코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공정·신속한 수사 필요
- (5) 평택 PCTC와 하청업체 PCM의 고용승계 분쟁 관련 부당노동행위 조사 필요
- (6) 월청과 하청노조간 고용승계 등 분쟁 발생시 지방고용노동청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 (7) 지방도로 주차관리요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사 사고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8) 인천 노동자 투신자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9) 코스트코 노사의 원활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력 및 코스트코의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
- (10) 지방고용노동청별 목표치가 포함된 임금 체불 감축 계획 수립 필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1) 조선업 퇴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 홍보 필요
- (2)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1) 대구 지역노조의 탈세 및 기부금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 (2) 티케이케미칼 정리해고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부실 조사 개선 필요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공공기관 공통 ◀

- (1)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필요
- (2) 중대 징계 사안에 대한 표창 감경 부적절
- (3) 법령에 따른 국기게양·관리 필요

▶ 근로복지공단 ◀

- (1) 산재판정 지체 등으로부터의 산재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및 근로

주요 감사 실시내용

- 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운영에 관한 개선조치 마련·이행 필요
- (2) 근로복지공단 인력 증원 및 직원 처우 개선 필요
 - (3)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근로자와 고용노동부 본부 공무원 근로자 사이의 차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4) 근로복지공단의 과격민원 대처 방안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 방안 마련 필요
 - (5)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6)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7) 킷서비스 종사자와 배달노동자의 산재 통계 분리 필요
 - (8) 건강보험기금·산재기금간 요양급여 정산 시 진료비용 총액에 대한 일괄 정산 도입 필요
 - (9) 산재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연계 등 추진 필요
 - (10) 배전노동자 직업성 암 판정 지연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1) 쿠팡 영업점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현황 전수 조사 필요
 - (12)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율의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한 판정 기준 개선 필요
 - (13) 현장실습생 산재 관련 교육부와의 업무 교류 강화 및 산재예방 지원 필요
 - (14) 외국인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산재 제도개선 등 조치 검토 필요
 - (15) 업무로 인한 자살 발생시 유족에 대한 산재 신청 권한 고지 필요
 - (16) 산재 발생의 환경적인 요인 등을 산재 관련 데이터로 분류하는 등 산재 자료 분류 기준 세분화 필요
 - (17) 간병급여 현실화를 위한 간병급여 인상 계획 수립 필요
 - (18) 산재병원 인프라가 부족한 경북 북부지역에 산재병원 설치 검토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9)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직무실 규모 조정 필요
- (20) 지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인정률 편차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21) 대지급금 사업주 변제금 회수 업무 개선 필요
- (22) 신규가입자로 제한된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삭제 검토 필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정한 내부 실적 평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종합진단 활성화 필요
- (3) 18세 미만 배달라이더 대상 재해예방 대책 마련 필요
- (4) 석면 해체·제거 업체 모니터링 강화 필요
- (5) 쿠팡 새벽배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마련 필요
- (6) 3D프린터의 유해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추가 연구 진행 필요
- (7) 산재사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공개 필요
-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9)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DL이앤씨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0) 물적분할된 회사에 대한 자체심사 및 확인 면제 사업장 지정의 효력 승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11)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등 필요
-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심사 점검·개선 필요
- (13) 산재 발생 현황의 유관기관 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시험감독위원 위촉 절차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 시험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
- (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관련 진행 상황 점검 필요
- (4) K-move 스쿨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 (5) 자격시험 업무 과정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 장애인 선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필요
- (2)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집합교육 방식의 장애인 식 개선교육 실시 필요
- (3) 장애인 고용 컨설팅 업체의 부적절한 고용알선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4) 공단 이사장의 허위보고와 갑질 문제에 대한 조치 필요
- (5)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 개선 계획 마련 필요
- (6)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10% 자부담금 부과 재검토 필요
- (7) 근로지원인의 자격요건에 비해 낮은 처우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8) 교육부·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9) 지역별·산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무고용제 개선 필요
- (10) 장애인 상시근로자 기준인 월 소정근로시간 요건 강화 필요

▶ 한국고용정보원 ◀

- (1) 고연령층 및 중장년층을 고려한 정보보호 대책 마련 필요
- (2) 워크넷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 (1) 교직원 출신 학장의 임기 종료 후 교직원으로의 복귀 근거 마련
- (2)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다문화 청년 대상 교육 사업의 전면 재검토 필요
- (3) 폴리텍의 반도체 학과에 대한 부실한 투자계획 점검·개선 필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 필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

- (1) 건설근로자 기능훈련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1)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순차적인 조정 필요

▶ 한국잡월드 ◀

- (1) 한국잡월드 파트너즈 대표이사 선임 필요
- (2) 한국잡월드와 한국잡월드 파트너즈 근로자 사이의 상여금 등 차별 시정 필요

3) 기상청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및 기상서비스 개선 관련 사항】
(1) 단기예보의 지역과 시간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
(2)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예측 정확도 향상 방안 마련 필요
(3) 재난문자 오류 수정 및 관련 기관과의 발송 기준 협의 필요
(4)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정상화 필요
(5) 우박에 관련 대응체계 마련 필요
(6) 이안류 및 너울 대응체계의 개선 대책 마련 필요
(7) 기상용어 표현의 통일 필요
【기상 인력 관련 사항】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방안 마련 필요
(2) 방재기상지원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3) 긴급문자 발송사업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 필요
(4)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상시조직화를 위한 노력 필요
【기상 장비 관련 사항】
(1) 중국산 악성코드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
(2) 기상관측선 건조 방안 검토 필요
(3) 해저지진계 등 관측장비 확보 계획 마련 필요
【기상행정 및 감시·감독 관련 사항】
(1) 기상정보 유통 관련 관리·감독 철저
(2) 연구 용역업체의 보고서 표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3) 부정당 업체와 지속적인 계약 체결에 대한 개선 필요
(4) 관인 무단 도용 인력에 대한 조치 필요

주요 감사 실시내용

【기타 사항】

- (1) ODA 관련 국산 장비 활용방안 고려 필요
- (2) 남북기상협력 관련 자문단 운영 방식 신중한 검토 필요
- (3) R&D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4) 산사태 등 재난유형별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강화 필요
- (5) 지진 관련 매뉴얼 점검 필요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 (1)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하자 시공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필요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 (1)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 필요
- (2)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가 본래 취지대로 활동하도록 방향설정 필요

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환경부 소관

▶ 환경부 본부 ◀

【공통사항】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및 방사성 물질 관련

- ▷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에서 2023년 8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처리된 오염수 외에도 세슘-137, 삼중수소, 기타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것
- ▷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일본 도쿄전력이 시행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1년간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만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인 영향 평가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33년, 탄소14는 5,730년, 스트론튬은 28.8년, 플루토늄은 2만 4,100년임
- ▷ 사고 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희석해도 된다는 국내 기준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부재하므로, 오염수 관련 R&D 추진 및 예산 확보 등 환경부의 역할을 수행할 것

-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도한 문제제기는 어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참여 필요성 및 오염되어 가공된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일본 정부에 끊임없이 전달하는 등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하여 6개 부처로 구성된 핵심 부처 TF에 환경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TF 참여 방안 및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
- ▷ 일본으로부터 제공 받은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포함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제반 정보를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것
 - 질병관리청의 오염수 보고서에 따르면, 저선량 방사능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됨
- ▷ 국내 기준을 위반한 방류는 우리나라 주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본이 이를 위반하여 오염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
- ▷ 미국 EPA의 경우, 핵폐기물 투기 관련 허가권과 방사능 물질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권한이 있으나, 환경부는 그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경부는 관련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 물관리 일원화와 같이 방사능 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주체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자체 대응 계획이 없으므로, 국내 담수·먹는물 안전 관리 주관 부처로서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 물질을 먹는물에 대한 새로운 감시항목으로 추가하고, 먹는물관리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수도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현행 불합리한 방사성 물질 관련 수질검사기준을 정비할 것

(2)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대응 문제

- ▷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배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진행 중에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가 불법이 아니게 되어, 과징금 감면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과징금 최종심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치 이상의 폐놀이 포함된 폐수를 자체처리하지 않고 현대OCI 공장으로 이동시킨바 있고, 환경부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2022.10.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함
- ▷ 환경부 소속 특사경이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할 것
- ▷ 환경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폐수 재이용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산업폐수관리정책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9. 폐수 재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는 등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폐수 재이용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모니터링 할 것

-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타 회사에서 정화 후 재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경우, 폐수 정화 업무를 하청업체 등에 외주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화업무 담당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에 따른 폐수 정화 업무의 외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수거된 라돈침대에 대한 처분 방안 마련 및 역학조사 실시 필요

- ▷ 환경부는 방사성 노출 우려로 수거한 라돈침대 폐기물을 야외에 적재하여 방치하는 등 라돈침대 폐기물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점검 및 처분방안을 마련하고, 라돈 침대 사용자에 대한 건강상의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 실시 방안을 검토할 것

(4)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준수 필요

- ▷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감사원 회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규정을 준수할 것

(5)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前 감사관 조사 요구

- ▷ 前 감사관이 산하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이유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는 등 공직 기강을 저해한 측면이 있으므로, 前 감사관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6) 환경부장관의 균형 있는 업무 추진 노력 필요

- ▷ 환경부장관의 세종 근무를 확대하고, 현재까지의 기관 방문 계획이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할 수 있도록 향후 업무 추진 계획을 균형적으로 수립할 것

(7) 환경정보네트워크 사이트 정비 필요

- ▷ 환경정보네트워크 사이트 운영이 미흡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어려우므로, 환경정보네트워크 사이트를 정비할 것

(8) 국립환경과학원 조직개편 필요

-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연환경연구과에서 관할하는 통합허가제도의 경우 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환경자원연구부와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현안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

【녹색전환 부문】

(1) 환경교육 강사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

- ▷ 특정 정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민 단체에 소속된 사람 등이 객관적·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한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강사 선정 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2) 녹색기업 지정 취소 기준 개선 필요

- ▷ 녹색기업이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환경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녹색기업 지정 취소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녹색기업 지정 취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녹색기업 지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08개 녹색기업이 142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27건에 불과함

(3) 시멘트 제품에 대한 친환경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한 필요

-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시멘트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EU 법적기준치의 최대 3.5배가 검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친환경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멘트 제품에 대한 친환경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제한할 것

(4)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친환경인증 마크와 환경성적표지인증 마크가 유사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 최근 5년간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9,000건에 달하고 있으나, 주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등 처벌이 미흡하므로, 그린워싱에 대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석포제련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 소나무 군락지에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등 석포제련소 주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석포제련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7) 통합허가 대상의 확대 필요

- ▷ 통합허가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통합관리 이후 초미세먼지 발생이 32%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대자동차,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이 대규모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통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통합허가 사업장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필요

- ▷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2021년 293개에서 2023년 745개로 증가하였음에도 인력이 증원되지 않아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9) 목분 재활용 기술의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승인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 규제로 인한 PB 산업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목분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자연보전 부문】

(1) 일본에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요구 필요

-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본에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것

(2)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 멸종위기종 1급 나팔고둥이 횡집에서 판매되는 등 혼획되어 유통

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홍보·제도 방안 이외에 유통구조를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3)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 마포구 소각장 부지 선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에 사업이 추진되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사례도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할 것
- ▷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 법을 위반하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한 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57%, 두 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23%에 달함에도, 등록 취소된 업체는 14%에 불과함

(4) 내성천 일대의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필요

- ▷ 내성천 일대의 자연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보호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복구 공사 등에 따른 생태 훼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내성천 일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

(5)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방식의 개선 필요

- ▷ 한정된 공간에서 포획, 방사를 반복하는 현행 반달가슴곰 관리 방식은 문제가 있으므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확대하는 등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ASF 광역울타리 사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필요

- ▷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 또는 생태계 영향 조사를 실시할 것
- ▷ 광역울타리 사업 추진과정에서 무허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7) 한강 밤섬에서 발견된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조치 필요

- ▷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한강 밤섬에 대한 생태조사 결과 생태계 교란 생물 10종이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8) 공주보 지점 멸종위기 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공주보 담수로 인해 수생태 환경이 악화되어 멸종위기 종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연구용역에 근거해 멸종위기 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떼까마귀로 인한 피해 예방과 공존 방안 및 조류 이동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 경기 남부 도심에 떼까마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떼까마귀 유도, 퇴치 및 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피해 예방 및 공존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조류 이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10) 야생동물 대체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점검 필요

- ▷ 야생동물 대체서식지에 대한 환경부 본부 차원의 점검이 부재하므로, 대체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점검을 실시할 것

(11)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필요

- ▷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지자체와의 상호 부지 교환을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등 행정 손실, 예산 낭비 등 각종 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활용한 사유지 매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 필요

- ▷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립공원 관리·이용권까지 특별자치도에 이관되게 될 경우 국립공원에서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립공원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13)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 필요

- ▷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멸종위기종인 산양

의 식생조사가 미흡하고, 사업 예정지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오지 않은 멸종위기종인 붉은 박쥐가 새롭게 발견된바, 동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

(14) 불법적인 전기울타리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불법 설치된 전기울타리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기울타리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기울타리 지원 비용 현실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5)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제도 예산 삭감에 대한 검토 필요

- ▷ 2024년도 예산안에 삭감된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예산은 국립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므로, 삭감 사유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할 것

(16) 산불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 산불은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의 매뉴얼 등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므로, 환경부 본부 차원에서 이를 마련할 것

(17) 국립공원의 임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 ▷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국립공원의 임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의 임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것

(18) 습지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진이 필요하나, 습지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습지에 대한 인식 증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습지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자원순환 부문】

(1) 현수막 폐기물 재활용 및 발생억제 방안 마련 필요

- ▷ 현수막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낮으므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수막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폐현수막 발생량을 조사하는 등 현수막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및 생분해 제품의 분리배출 대책 마련 필요

-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퇴비화와 생분해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친환경 인증을 중단하여 인증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 생분해 제품은 조건부 분리배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생분해 제품의 분리배출 필요성 홍보 및 분리 시설·처리 방법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 PB산업의 목분 사용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

- ▷ 목분을 폐기물로 분류함에 따라 목분을 연료로 이용하던 PB(Particle Board) 산업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목분을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전국적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

(5) 폐기물 성·복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 폐기물 성·복토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이 이용되어 폐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복토 계약서 상 토지소유자의 귀책 조항 추가, 일반 토지에 폐기물 성·복토 시 기준 설정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6) 시멘트 업체의 반입 폐기물 관리 방식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 ▷ 시멘트 업체는 폐기물의 반입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소각업체보다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멘트 업체의 반입 폐기물 관리 방식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재검토할 것

(7) 시멘트 중금속 법적기준 마련 관련 구체적 계획 마련 필요

- ▷ 시멘트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시멘트 등급제 도입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멘트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8) 시멘트 업계의 더스트 관리방안 마련 및 불법 매립 업체 고발 필요

- ▷ 쌍용C&E 등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활용하여 시멘트 제조시 발생하는 킬른더스트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킬른 더스트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 시멘트 소성로에서 염소더스트를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멘트 업계의 염소더스트 처리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불법 매립한 업체를 고발할 것

(9) 자원순환의 기준 재정비 필요

- ▷ 현재는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폐기물 소각 처리가 재활용에 해당하여 자원순환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원순환의 기준을 재정비할 것

(10)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인근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매연,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수입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조사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11) 폐납산 배터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납산 배터리가 불법 처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폐납산 배터리 처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2) 납 재활용 공장과 인근 지역의 공기 중 납 농도에 대한 지도·점검 필요

- ▷ 납 재활용 공장이 인근 지역의 공기 중 납 농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장 내 납 화학물 농도 및 인근 지역의 납 화학물 농도 등을 분석하는 등 납 오염물질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13) 전기차 배터리 회수 방안 및 배터리 재활용과 산업화 방안 마련 필요

- ▷ 폐배터리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환경공단과 거점수거센터의 보관 가능 수량 부족, 미흡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배터리 회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4) 고품질 연료 품질검사 방식 및 처분 방식의 개선책 마련 필요

- ▷ 표본조사 방식의 고품질연료 품질검사의 한계, 품질검사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관 중인 연료 총량이 적은 사업장의 경우 부적합 판정 이후 연료를 소진하여 별도의 처분이 없으나, 보관 중인 연료 총량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연료를 전부 소진하기 어려워 부적합 판정에 따른 사용금지 및 폐기처분 비용 발생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폐기물 열분해 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폐기물 열분해 산업이 폐기물을 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무 쿼터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석유사업법에 열분해 기술을 이용한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보급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방안을 마련할 것

(16) 일회용품 저감 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일회용품의 친환경 상품으로 전환 시 비용 문제, 사용한 친환경 제품도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각 처리에 따른 오염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의 지원체계 개선 및 사용한 친환경 제품의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 카페나 식당은 일회용 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영화관이나 야구장의 경우 일회용 제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7) 방치폐기물 매립장 발생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 방치폐기물 매립장이 발생하면 지역 주민이 악취와 침출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각업체와 마찬가지로 매립업체의 처리이행보증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여 자체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 최소 매립용적을 개정하여 매립장의 사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방치폐기물 매립장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18) 마포구 소각장 입지 선정 재검토 필요

- ▷ 마포구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일부 후보지에 대해서만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최종 입지를 선정하여 환경부 지침을 위반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소각장 입지선정을 재검토 할 것

(19)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처벌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적이 미흡하고, 규정을 위반한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물관리 부문】

(1) 4대강 녹조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 외부 오염원의 유입이 4대강 녹조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이므로,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 영주댐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댐의 불필요한 구조물의 제거 조치 및 강의 자연성 회복 조치가 필요하므로, 댐 건설사업과 대규모 준설사업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영주댐 물 방류를 고려할 것
- ▷ 영주댐이 있는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심각하여 댐 인근 방문객이 유해 남조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대구시와 고령군의 수돗물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상수원 내 증식한 녹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 방류 등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2) 전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특혜 논란에 대한 조사 필요

- ▷ 전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자가 거짓된 글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안이 환경부에 보고되지 않아 해촉되지 않았고, 수자원공사가 해당 전직 위원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파악되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3)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홍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사업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댐 건설 및 하천 준설사업 등 수해 예방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할 것
- ▷ 강수 예측시스템의 정확성, 소방도로 및 임도 건설 시 안전점검 여부, 사방댐 건설과 준설의 적시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물관리·치수관리의 일원화에 대해 검토할 것
- ▷ 지류·지천사업, 댐 건설, 준설 등 수해 예방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고려하여 사업 시행 필요 지역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수해 예방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4) 지방의 상수도 보급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상수도 공급 사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후, 해당 사무가 지자체의 후순위 사업으로 배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의 상수도 보급이 부진하여 도서 지역 등에서 물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상수도 공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5) 내성천 홍수 피해 대책 마련 필요

- ▷ 내성천 준설 작업이 진행될 경우, 흰수마자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성천 준설 시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내성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방만 높이는 경우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재해 예방, 그리고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함께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내성천의 적절한 준설이 미비하여 내성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내성천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영주댐·안동댐·임하댐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것

(6)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예측 개선 필요

-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2030년 국내 최대 물 부족량 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므로,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관련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의 절차적 타당성 검토 필요

-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 참여자의 다양성 부족, 내용상 변경에 대한 미흡한 타당성 검토 등 절차 위반의 여지가 있으므로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것
- ▷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때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의견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하였으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 결정할 때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여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위반이 의심되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

(8) 먹는 물의 방사능 물질 관리 방안의 개선 필요

- ▷ 수도법에 따른 먹는 물에 대한 기준에는 삼중수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염지하수의 경우에 한하여 삼중수소를 검사하도록 규정하는 등 먹는 물의 방사능 물질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저수지 관리 개선 필요

- ▷ 노후화된 저수지가 다수 있으므로, 저수지 관리 방안을 포함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것

(10) 상수원의 오염원 관리 필요

- ▷ 시민들에게 더 좋은 먹는 물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원 인근 오염원을 관리할 것

(11) 신규 댐 건설 계획 관련

-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등 신규 댐 건설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댐 건설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등 댐 건설 계획의 절차적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댐 건설 계획에 대해 재검토할 것
- ▷ 소규모의 사방댐 건설,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을 먼저 실시하고, 신규 댐 건설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기후변화 및 수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댐 건설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댐 건설을 포함한 치수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수몰민 보상 문제 등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

(12) 국가 수질자동측정망 측정 장비 사업 중단 관련 조사 필요

- ▷ 국가 수질자동측정망 중 다항목 측정기 공급계약 시 한국환경공단이 기재부의 계약예규를 위반하고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계약 당시의 요건 및 담당자를 재조사할 것

(13)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공시 자료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정치에 대한 점검 필요

-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공시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과 실제 농약 사용량 간에 큰 차이가 있는 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지자체간 자료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 및 측정치를 점검할 것

(14) 상수도관망 세척사업 독려 방안 마련 필요

- ▷ 상수도관망이 노후화되어 세척이 필요하므로, 지자체가 상수도관망 세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 방안을 마련할 것

(15) 빗물이용시설 관리 개선 필요

- ▷ 빗물이용시설 설치·이용 관련 통계 관리가 부실하므로, 빗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빗물이용시설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6)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관련 위법성 시정 필요

-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도는 법률상 위임 없이 환경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위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17) 도시침수발생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실질행 및 입찰 적정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도시침수발생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실질행이 부진하고, 연구용역·자문 참여업체가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여 입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행률 제고 및 입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8) 조류경보제 개선 필요

- ▷ 조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채수방법의 개선을 포함한 조류경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9)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 필요

- ▷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인근 4개 면의 상호 간 이동이 어렵고, 인구가 40% 이상 감소하였으므로 안동호 횡단교량을 건설하여 단절된 도로(도산 동부~예산 부포)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총액계상사업 편성 필요

- ▷ ‘국가하천정비(일반)’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액계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5,569억원에 달하는 예산(2024 예산안)이 총액으로 계상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위법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21)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토양안전성 분석 결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토양안전성 분석 용역에서 토양오염 정도가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서의 토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잔디 식재 등 충분한 토양오염 저감조치를 하였다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입장 차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22)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잔존 슬러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 잔존 슬러지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를 고형 연료화하고 있으나, 판매 단가가 낮아 경제성이 부족하고 화석 연료 수요 감소에 따라 판매 실적도 낮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후 부문】

(1)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재설정 및 목표달성 방안 마련 필요

- ▷ 정부가 설정한 2030 NDC는 통합평가모델 등 주요 분석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NDC를 적절한 수준으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2030 NDC 부문별 감축목표에서 국제감축·신재생에너지·CCUS 분야의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2030 NDC 달성 방안을 검토할 것

(2) 탄소 포집 이용 및 저장(CCUS) 활용 필요

- ▷ 국내에서는 아직 해외에 비하여 CCUS가 상용화되지 않았으므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US 기술 적극 활용할 것

(3) CF100 추진의 문제점 검토 필요

- ▷ CF100(Carbon Free 100%)이 RE100(Renewable Energy 100%)보다 이행하기 어렵고, 국제적으로 RE100이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CF100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할 것

(4) 탄소중립 목표 달성 수단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 필요

- ▷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고, LNG를 통해 전환 부문의 감축을 높이는 방식은 탄소중립 목표치와 녹색채권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재설정 등 적극적인 역할 노력 필요

- ▷ RE100 · 탄소국경세 등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함에도 태양광 사업이 중단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 수행에 소홀한 측면이 있으므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문제를 검토할 것
- ▷ 태양광 · 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이 감액되어 관련 설비를 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6) 배출권거래제 초기 할당량과 취소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 ▷ 배출권의 과다 할당으로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하고, 배출 허용 총량 설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환경보전 부문】

(1) 가습기 살균제와 살균필터의 실질적 차이점 확인 및 분담금 부과 제외 결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 ▷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에 장착되는 살균필터는 그 구성성분이 유사함에도 살균필터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와 살균필터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근거를 제출하고, 은 성분 용출 실험을 다시 수행하여 살균필터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 의무 제외 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2) 가습기 살균필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 ▷ 가습기에 장착되는 살균필터 제조자에 대하여 조사 미흡으로 가습기살균제 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 가습기 장착형 살균필터에 대한 분담금 미부과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3)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확인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월성원전과 주민 암 발병 관련성이 미비하다고 발표된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보강 조사 및 타 지역 대조군과의 검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환경센터 건립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4) 석면 해체작업 관련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석면 해체 작업 시 분진 방지를 위한 음압기 설치 대수가 기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작업변경 신청 대상이 되도록 하고, 동일 사진의 반복 사용 및 서명 누락 등 석면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허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5)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화학물질관리협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 최근 5년간 국내 10대 대기업이 모두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규제 합리화를 이유로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 ▷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정부사업 위탁·대행용역비 편취 등 문제, 민간협회의 공공위탁업무 수행 관련 정당성 문제 등에 대하여 환경부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 및 전담 치료기관 설립 등 검토 필요

- ▷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입증책임 전환, 공소시효 연장,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재원 확보 방안 및 피해자 전담 치료 기관 설립 등을 검토할 것

(7)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옥시의 추가 납부 거부 공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인 옥시가 환경부에 추가 분담금 납부 거부 공문을 보냈으나 환경부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옥시와 같이 해외 본사의 국내 철수 등의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8)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및 환경 개선 예산 확보 필요

- ▷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하여 환경안전진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및 미진단 시설의 전수조사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9) 정확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철거 계획 마련 필요

- ▷ 석면 사용 금지 이후에 실시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서 오히려 석면 건축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등 조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속 조사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석면 철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철거 계획을 마련할 것

(10) 석면 건축물 중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 석면건축물 중 학교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2곳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이 위해성이 낮다는 결과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으므로,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학교에 사용된 석면 위해성을 전수 조사할 것

(11) 부적절하게 운영된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 해지 검토 필요

- ▷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표준교재의 임의적인 수정 등 교육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아니한 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환경부는 위탁기관의 법적 해지 근거 미흡을 사유로 소극적으로 조치하였으므로, 위탁기관 지정 해지를 재검토할 것

(12)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각 유역환경청에서 시설 결함, 안전기준 미준수 등으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에 대하여 단순 경고 및 과태료 처분만을 함으로써, 지속적·반복적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가중처벌 및 강화된 행정처분 방안을 검토할 것

(13) 유해성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필요성 검토 필요

- ▷ 납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 관할구역 내 삼지금속공업과 같이 유해성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14) 아로마오일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 초음파 가습기와 초음파 디퓨저의 작동원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아로마 오일을 초음파 가습기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나 초음파 디퓨저에 사용하는 경우 시장에서 적법하게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대기보전 부문】

(1) 대기오염 측정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사후관리 필요

- ▷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자가 측정이 규격에 맞지 않는 측정관 사용, 2인 1조 원칙 미준수, GPS 기록 조작 등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대기오염 측정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현장교육 강화,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

(2) 전기화물차의 성능 비례 보조금 지급 및 충전 인프라 개선 필요

- ▷ 주행거리 및 충전효율이 낮은 중국산 전기화물차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급함으로써 다른 전기차 이용자들이 기존의 충전 인프라 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성능에 비례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 및 충전 인프라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 골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만 7,000여개 중 TMS 부착 사업장은 800여개에 불과하므로, TMS 부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자가측정 신뢰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 집진기 설치 진행 상황이 계획 대비 부진하므로, 환경부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설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을 통해 승강장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중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제품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성능을 점검하고 지하역사 공기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조속한 구축 필요

- ▷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된 표준화된 공정시험방법론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관리방향 및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관리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

(6) 공공·민간 전기차 완속충전기 관련 요금 체계 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

- ▷ 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공공 완속 충전기의 충전요금과 민간 완속 충전기의 충전요금 간 차이가 있으므로, 충전요금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한 요금 책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 LPG 화물차 구매보조금 폐지 유예 방안 검토

- ▷ 2024년부터 LPG 화물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하면 실제 영업을 위해 경유 차량 대신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LPG 화물차와 관련한 구매보조금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조리흡 유해성평가와 공정시험법 마련 필요

- ▷ 조리 중 발생하는 조리흡(fume)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리흡 유해성평가 및 공정시험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경부는 조속히 조리흡 관련 유해성평가 및 공정시험법을 마련할 것

(9) 유증기 환기·저감시설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조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유증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증기 환기·저감 시설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0)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과 측정인 시스템 간 연계 방안 마련

-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과 측정인 시스템의 관리기관이 달라 상호 검증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과 측정인 시스템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11)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초과 가스냉난방기(GHP)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가스냉난방기(GHP)의 학교 대상 신규 설치를 중단하도록 산업부와 협의하고, 기 설치된 가스냉난방기에 대한 보증제도 도입, 처벌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2) 라돈 측정 대상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원룸, 오피스텔에 대하여도 라돈 측정 의무 및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
- ▷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 실시되는 라돈 측정의 경우 시공사에서 자가측정 또는 대행사가 측정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신뢰도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1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필요

- ▷ 4,5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해당 사업장 선정 기준에 대하여 환경부가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것

(14) 도로 청소차에 대한 성능 검증 방안 마련 필요

- ▷ 현재 환경부가 마련한 도로 청소차 검증 절차 및 항목이 EU에 비하여 적고, 필터 성능 등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청소 과정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다각도의 성능 검증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

(15) 친환경도료 의무 사용률 기준 유예에 따른 형평성 보완 방안 마련 및 제품 검사 필요

- ▷ 환경부가 친환경도료 의무 사용률 기준을 2년간 유예함에 따라 사전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설비 설치를 완료한 업체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조치를 강구하고, 새롭게 개발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저함유 도료에 대한 안전성·휘발성 검사를 시행할 것

【소속·산하기관 공통사항】

(1) 산하기관 및 관련 협회의 성과급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 환경부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산하기관과 화학물질관리협회, 순환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협회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이 과도한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2) 먹는 물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필요

- ▷ 안전한 먹는 물 확보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시민들이 먹는 물을 공급받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먹는 물을 관리할 것

(3) 공사가 진행 중인 홍수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홍수취약지역(5곳)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4) 화학물질관리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준수여부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 의무가 준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화학물질안전원과 각 유역환경청장은 보다 강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5) 파크골프장의 불법 조성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점용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크골프장의 불법 운영을 감독하고,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6) 재해예방 관련 법정 의무 이행사항 점검 철저 필요

- ▷ 6개 환경청의 재해 예방 및 대비 관련 법정 의무 이행사항 이행률이 용역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후 증가했으나, 용역업체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여 용역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할 것
- 6개 환경청의 법정 의무 이행사항 이행률이 2022.8.에는 평균 58%였으나 컨설팅 후 2차 점검 결과 의무 이행률이 97.4%로 상승함.

(7) 야생동물 대체서식지에 대한 실질적인 현지 확인 및 점검 필요

- ▷ 광주중앙근린공원 맹꽁이 서식지 등 야생동물 대체서식지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환경청은 대체 서식지에 대한 실질적인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것

(8)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9) 드림파크 골프장에 대한 조사 필요

- ▷ 드림파크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측정 오류로 인해 드림파크 골프장이 우수골프장으로 선정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선정 과정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

(10) 고품 연료 생산의 낮은 경제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슬러지를 이용한 고품 연료의 경우 생산 비용에 비해 판매 가격이 낮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화석연료 수요 감소에 따라 고품 연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판매되지 못한 고품 연료를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특정도서에서의 야영·조리 행위 금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및 과태료 부과 필요

- ▷ 특정도서에서의 야영과 인화물질을 이용한 조리행위에 대한 단속을 미흡하게 수행한 측면이 있으므로, 각 환경청은 환경부와 논의하여 특정도서에서의 야영·조리 행위 금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

- 특정도서에서의 야영과 인화물질을 이용한 조리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함

(12) 공무원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 ▷ 4대강 물환경연구소 연구원들이 사용할 사업비, 운영비, 여비 전액이 삭감되었고,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수질총량관리센터 연구직 노동자들의 호봉 인상분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공무원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으므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유역환경청의 재해 예방 관련 법정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 환경부는 재해 예방 및 대비 관련 유역환경청의 용역보고서와 유역환경청별 법정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것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홍수관리구역 농토의 수해 보상 대책 마련 필요

- ▷ 홍수 발생 시 홍수관리구역에 위치한 농토의 경우 일반 농토와는 달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해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

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환경과학원 ◀

(1) 염지하수와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생산된 먹는 물의 감시항목에 방사능 관련 사항 지정 필요

-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염지하수와 해수의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염지하수나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생산된 먹는 물의 감시항목에 방사능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지정할 것

(2) 하천·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 마련 필요

-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하천 및 먹는 물의 방사성 물질을 감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천과 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을 마련할 것

(3)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개발비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연구용역과제를 해당 산학협력단에 발주하였으며, 반복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도 별도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자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할 것

(4) 라돈 저감장치 확보방안 마련 필요

- ▷ 라돈 저감장치를 지하수 관정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지하수 안전성 담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라돈 저감 장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가습기용 항균부품인 원통형 장착 필터에 대한 성분 확인 필요

- ▷ 가습기 장착형 필터 사용시 살균물질의 용출 및 방출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2021년 연구용역의 조사대상 제품인 원통형 장착필터의 성분을 확인할 것

(6) 방사능 물질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규정 준수 필요

- ▷ 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는 방사능 물질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 따르지 않고 있어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으므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방사능 물질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규정을 준수하고, 시료채취 규정 준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통지할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시 해수는 60L, 지표수는 20L를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 원근해 해수를 10L,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하천이나 지표수에서 1L를 채취하고 있음

(7) 대기오염물질 측정 장비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및 도입 결정까지의 합리성 재검토 필요

- ▷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해 구입한 드론 등 장비의 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도입 결정까지의 합리성을 재검토할 것

(8)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추진 필요

- ▷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유입에 따른 국내 환경 영향 연구를 실시할 것
- ▷ 시멘트에서 생성되는 킬른더스트(Kiln Dust)의 성분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할 것

(9) 적절한 현안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 검토 필요

-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연환경연구과에서 관할하는 통합허가제도의 경우 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환경자원연구부와의 연관이 있으므로 적절한 현안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립생물자원관 ◀

(1) 집비둘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 유해야생동물인 집비둘기의 관리 방안이 부재하여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강유역환경청 ◀

(1)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 남산에는 관찰 식물종 185종과 보호 가치가 있는 야생동물 24종, 관찰 곤충류 170종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재검토 및 반려 필요

- ▶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는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 개체 수 누락 및 낙동강 횡단 교통량의 거짓 작성 등이 의심되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하고, 거짓·부실 작성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것

(2) 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참여 제한 필요

- ▷ 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금호강 보도교 사업 중단 및 팔현습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검토 필요

- ▷ 금호강 일대에 형성된 팔현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2종이 확인되고 있고, 금호강 보도교 설치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금호강 보도교 설치 사업을 중단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환경부에 팔현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건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4) 낙동강 보 구간에서의 메탄 발생 기전에 대한 연구 필요

- ▷ 낙동강의 보 구간에서 메탄 농도가 높게 나타나 녹조로 인한 메탄 발생이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메탄의 발생 기전에 대해 연구할 것

▶ 금강유역환경청 ◀

(1)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대청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청호 인근 캠핑장의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고, 충청북도가 사전 협의 없이 대청호 무인도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강화 및 사고 대응체계 개선 필요

- ▶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당시 임시 제방의 높이가 법적 기준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금강유역환경청의 안전 조치가 미흡한 점, 사고 발생지역의 홍수취약지역 미포함 등 사고 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가 부실했으므로, 향후 사전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 ▶ 홍수 정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홍수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가능성 사전점검 등 사고 대응체계를 개선할 것

(3) 납 배출 업체에 대한 민원 검토 및 관리 강화 필요

- ▶ 금강유역환경청 관할구역 내 위치한 삼지금속공업이 납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MS 측정치를 공개하지 않는

다는 민원이 있고, 단순 과태료 부과 등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처벌 정도가 약하므로, 제기된 민원을 검토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

▶ 원주지방환경청 ◀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동의에 관한 감사 필요성 검토 필요

-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한국환경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고, 추가적인 환경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동 사업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2) 쌍용 C&E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쌍용 C&E의 폐기물 처리 보고 작성이 부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쌍용 C&E의 폐기물 발생량, 처리량에 대한 보고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대구지방환경청 ◀

(1)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통합허가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지속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법 위반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
- ▷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103가지의 통합허가조건 이행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조업 중지,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 ▷ 무방류 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고 지표수나 지하수로 방류되는 용수 여부, 제련 잔재물 보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 석포제련소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와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

(2)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과 조사방법의 다양화 필요

- ▷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방법이 도보나 망원경, 사진 촬영으로 진행되어 식생 확인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무인센서 카메라 등을 활용한 무인조사 방법을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할 것

(3) 내성천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조치 필요

- ▷ 내성천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는 영주댐의 대규모 녹조와 내

성천 서식 주요 멸종위기종의 급격한 감소의 핵심 인과관계 표현을 삭제하는 등 미흡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4)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철저한 구성 및 운영 필요

- ▷ 금호강 보도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검증으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합리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할 것
- 금호강 보도교 설치예정지 인근에서 법정 보호종이 12종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서에는 3종만이 기록되어 있음

(5)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 완료 합의에 대한 검토 필요

- ▷ 문화재 이전·복원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합의 하에 대구지방환경청이 영주 다목적댐 최종 준공 승인을 하였으나, 국가지정 문화재의 이전·복원사업 완료 판단 여부 책임 주체인 문화재청장의 참여 없이 합의가 도출되어 합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1) 특혜성 연구용역 발주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실시 필요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연구용역을 센터 소속 공무원의 박사 과정 지도교수에게 배정한 사안에 대한 특혜성 연구용역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

(2) 미사부하량 데이터 업데이트 연구 계획 수립 필요

- ▶ 도로 재비산먼지 배출계수 산정 근거인 미사부하량 데이터는 2008년 연구 결과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산출된 도로 재비산먼지 배출량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미사부하량 데이터 업데이트를 위한 연구 계획을 수립할 것

▶ 금강홍수통제소 ◀

(1) 홍수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방안 마련 필요

- ▶ 오송 침수 사고의 경우 지자체와 환경부 산하기관 간의 협조가 미흡하여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홍수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검토, 재난 예산 확보 등 홍수 대응 협조체계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수자원공사 ◀

(1) 안동댐 녹조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 안동댐 녹조 해결을 위해 일일 용역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녹조 문제는 단기간 인력 투입을 통한 해결이 어렵고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녹조 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녹조 관련 연구 시설 확충 등 녹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길안천 건천화 문제의 해결방안 연구 필요

- ▶ 임하댐과 영천댐 연계 공사로 인해 길안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길안천 건천화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것

(3) 관로 불법매설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필요

- ▶ 최근 관로의 불법 매설로 인한 고소·고발이 있으므로, 불법 매설된 관로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4) 환경분쟁 예방 교육 참여 및 분쟁 저감 방안 마련 필요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환경피해 예방 및 분쟁 발생 예방 교육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참여가 미흡하므로,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고 환경분쟁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연루된 환경분쟁은 61건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분쟁 다발기관 2위이며, 383억원이 배상액 및 변호

사비 등으로 소요됨

(5) 장기적 관점의 물관리 계획 수립 필요

- ▷ 기후변화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해 예방을 위하여 보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과 대규모 댐 리모델링을 포함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이수·치수대책을 재점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물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6) 성과목표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 ▷ 온실가스 저감량 등 일부 성과목표의 경우 종전 대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되어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정 목표치의 적정성에 대해 재확인할 것

(7) 영산강과 섬진강 도서 지역의 가뭄 시 먹는 물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 영산강, 섬진강 지역 가뭄 발생 시 도서지역의 염지하수 이용 관련 낮은 수질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해수담수화 및 염지하수 관련 먹는 물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8) 반도체 사업을 위한 용수 공급 확대 필요

- ▷ 반도체 사업을 위한 용수가 부족하므로, 반도체 사업을 위한 용수 공급을 확대할 것

(9) 건설폐기물법 준수 노력 필요

- ▷ 한국수자원공사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가 많은 편이므로,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

(10) 대청댐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침수 피해 발생 원인 파악 필요

- ▷ 강수량이 줄어든 시점에 급격히 대청댐의 방류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전라북도 3개 면(용안면, 망성면, 용동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11) 시화호 발전 방안 마련 및 시화호 성공사례 홍보 필요

- ▷ 시화생태문화지구 및 산업단지 지구의 조성 등 시화호 인근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시화호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12) 보를 이용한 가뭄·홍수 대응능력에 대한 근거 제시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 수로 미구비 등으로 인하여 보를 이용한 가뭄·홍수 대응 능력이 미흡하고 수자원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보의 홍수조절능력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보에 가둔 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13) 손실 발생 해외사업에 대한 대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수익창출 방안 마련 필요

- ▶ 과거에 추진한 해외 사업에서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신규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기존 손실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해외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및 수익창출방안을 제출할 것

(14) 조직 기강 확립 및 관리 노력 필요

- ▶ 전임 사장 재임 시 회사 내 성비위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조직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 ▶ 댐 청원경찰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댐 청원경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 한국수자원공사는 성비위 관련 통계수치가 부서별로 다른 등 기본적인 통계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직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적극적 시행 필요

- ▶ 지속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이 포함된 물환경관리 선도사업 등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16) 노후관 개량 사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 노후관 개량 사업 진행이 부진하고, 관로 노후화 시 침수피해, 단수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고 반영을 확대하는 등 노후관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

(17) 4대강 16개 보의 경제성 재검토 필요

- ▷ 건설사의 보에 대한 하자책임 기간 만료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보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수익성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자원공사의 수익은 한계가 있어 수자원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4대강 사업에 따라 설치된 16개 보의 경제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

(18) 경인아라뱃길 운영 문제

- ▷ 경인아라뱃길의 지난 10년간 사업 목표 대비 실제 물동량이 0.9%로 저조하였고 상당한 운영 손실이 발생한 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우원식 위원)

▶ 한국환경공단 ◀

(1)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할 필요

- ▷ 한국환경공단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퇴직자 고용승계에 대한 사항을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음에도 자문을 받

은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

(2) 대기오염물질 측정 현장 실태 파악 및 환경공단 측정인 시스템과 환경부 SEMS 간 연계방안 마련 필요

- ▷ 낮은 계약 단가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한국환경공단의 결과값에 대한 실체적 점검이 미흡하며, 측정인과 SEMS에 등록된 측정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가측정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측정인과 SEMS 간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

(3) 악취저감 컨설팅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저감 컨설팅 효과가 저조한 경향이 있으므로 사후 피드백 등 컨설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흡입독성시험 시설과 성분분석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 확보 노력 필요

-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흡입독성시험 시설과 살생물제 성분분석 장비를 도입하였음에도 운용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5)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탄소중립포인트의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 RFID 운영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소는 한계가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소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6) 촉탁직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 촉탁직 채용과정에서 채용 관련자의 참여로 블라인드 채용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내부위원 위촉 배제 요건 등 촉탁직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7)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등급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필요

- ▷ 실태조사에서 적발 건수가 많은 기업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등급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미흡하므로, 위반 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8) 수소차 충전소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 의제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수소 충전소 설치 이전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9) 이웃사이센터 운영주체 일원화에 따른 인력 충원 방안 마련 필요

- ▶ 환경보전협회와 환경공단이 수행하여 오던 층간소음 민원 업무가 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처리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공원공단 ◀

(1)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권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 ▶ 특별자치도가 국립공원 관리권을 갖게 될 경우 국립공원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시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단이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특수산악구조대 인력 증원 및 추가 배치 필요

- ▶ 현재 북한산국립공원에만 특수산악구조대가 배치되어 있어, 설악산국립공원 등 지형이 험한 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수산악구조대의 인력을 증원하여 고위험 지역에 추가 배치할 것

(3) 국립공원 탐방로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어매트 철거 필요

- ▶ 국립공원 탐방로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어매트는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게 철거 조치할 것

(4) 해양탄소흡수원 복원 전략의 점검 필요

- ▷ 잘피를 복원한 지역을 현장 확인한 결과, 보고서와 달리 잘피 일부 지역의 활착률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식 적합지 선정 및 관리 등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해양탄소흡수원 복원 전략을 점검할 것

(5) 국립공원 내 임도의 필요성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임도확충은 멸종위기종 서식지 단절 및 자연생태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으나, 산림청은 산불 방지를 위한 국립공원 내 임도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의 임도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공개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6)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에 대한 입장 명확화 필요

-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허가 이후,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에 대한 국립공원공단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

(7) 국립공원 내 민가 지원 사업 개선 필요

- ▷ 국립공원 내 민가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으므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민가 지원 사업을 개선할 것

(8) 국립공원 내 잔디 주차장 설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국립공원 내 잔디 주차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가 낮지만, 장애인 보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잔디 주차장 설치에 대해 재검토할 것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의 인사청탁 및 특혜 논란에 대한 조사 요구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의 감사 재직 시절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친인척에게 용역을 위탁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조사할 것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 ▷ 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취임 과정에서의 사장추천위원회 회의록 불성실 제출 및 관련자료 미제출 등의 문제와 관련,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골프장 운영관리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대한 점검 및 이행 필요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하여 용역사((주)이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림파크 골프장은 업체와의 계약에 임금채권보험가입증서 첨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원청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친환경 인증제도가 그린워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 비목재 종이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개선 마련 필요

- ▷ 사탕수수를 이용하여 만든 비목재 종이는 일반 종이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탄소흡수원인 나무에 대한 별목이 이뤄지지 않는 등 친환경 제품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인증 기준이 부재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비목재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 우리나라의 ODA 사업을 통하여 베트남의 사탕수수를 활용한 개발 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기업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목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4)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보완 노력 필요

-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4년도 예산안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예산이 삭감된 문제가 있으므로,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를 신설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고,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

(5) 용자 심사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체계 마련 필요

- ▷ 용자 심사기준에 따르면 환경법 중대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용자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중대 위반에 해당하여 용자를 못 받는 기업이 드물고, 용자를 받은 기업들이 폐기물 안전수칙 및 대기배출기준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용자 심사기준의 적합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용자 기업에 대해 중간 점검과 최종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할 것

(6) 친환경 제품의 과장·거짓 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제품 리콜 실시 검토 필요

- ▷ 친환경 제품의 과장·거짓 광고로 인해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고, 적발된 상품 중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실시 검토 및 친환경 제품의 과장·거짓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7)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적체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판정을 연말 내 완료할 것
- ▷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증명된 사람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10년에 한 번씩 매년 실시하는 것은 과잉행정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구제급여 지급 절차에 대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등 각종 수급금에 대한 적용 기산점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미성년자일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군대 신체검사 등급산정 및 대학 입학 등에 관한 사회적 배려 방안을 검토할 것

(8)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 필요

-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실적이 미미하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생태원 ◀

(1) 자연자본 정보공시의 이행력 증진 방안 마련 필요

- ▷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의 권고안이 확정됨에 따

라 이에 대한 선도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공시의 이행력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

(2) 유기·방치 야생동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전시금지 등이 도입되어 유기·방치되는 야생동물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간 부족으로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못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규정 개정안 재검토 필요

- ▷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의 승진과 성과급에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위축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하려는 정책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할 것
- 현행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동일 직급 동일 평정 그룹의 평균 점수인 B를 부여하고 있으나, 동 시행세칙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의 평정 상한점을 C로 낮추고 있음

(4) 아르헨티나 개미에 대한 선제적 조사 필요

- ▷ 아르헨티나 개미가 부산역에서 발생하여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전국 철도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조사를 실시

할 것

(5) 한강 밤섬 내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및 습지조사 결과의
조속한 제출 필요

- ▷ 한강 밤섬 내에서 가시박, 베스 등의 생태계교란 생물이 발견된
바, 이를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한강 밤섬이 습지보호지
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습지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조속히 제출
할 것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사무실과 실험실 분리 조치 필요

-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사무실과 실험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가스누출탐지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학사고가 발생할 위험성
이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무실과 실험실을 분리하기 위
한 조치를 마련할 것

▶ 한국상하수도협회 ◀

(1) 성과급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과거 종합감사에서 성과급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성과급 지급 액수가 오히려 증가했으므로, 점검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할 것

▶ 환경보전협회 ◀

(1) 환경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환경교육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 목적의 수소버스·교구 운영 등 계속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24년도 예산안에 환경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52%, 학교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81% 삭감 반영됨.

2)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노동부 본부 ◀

【공통사항】

(1)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5곳)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

-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5곳(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

(2) 독립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전문성 강화 필요

- ▶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원의 약 30%가 부임 직전 10년간 산업안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없고 부임 이후 부서 재직기간이 평균 9.56개월에 불과하여 전문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인력을 확대 선발하고 동일한 직무 내에서 보직을 순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고용노동부 본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고용노동부가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안전감독

사건에 대한 다수의 미조치, 지연조치, 현장 미방문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에 대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본부의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4)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출신 직원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사상 차별 해소 필요

- ▶ 2018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해산하고 그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급을 낮추어 재입사가 이루어졌으며, 재입사자의 고위직 승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차별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기게양 실태 관리 필요

-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공공기관 106개 지사 중 25%에서 국기봉 관리가 허술하고, 게양 위치도 달리하는 등 「대한민국국기법」을 위반하여 국기를 관리·게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관리·게양할 것

(6) 산업안전감독관의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 지급 방안 마련

- ▶ 산업안전감독관의 여비 집행이 지연되는 등 출장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안전감독관의 원활한 현장 조

사를 위해 여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

(7)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처우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타 공공기관 직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으므로, 임금 수준 개편 등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8)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점검 필요

-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종 해킹 방식으로 23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고용노동부도 신종 해킹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점검을 실시할 것

(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필요

- ▷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의 전략자산으로서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을 필요가 있으므로, 북한 주민을 위한 노동정책 개발 및 연구 등에 북한이탈주민이 역할을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고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0)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대한 감사·감독 실시

- ▷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그 정관이 1명의 회원에게 30명의 투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헌법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부당 선거 개입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대하여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시정조치할 것

(11) 고용노동부 직원의 음주운전·성범죄 관련 비위행위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 고용노동부 직원의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등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고용 부문】

(1)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선 필요

- ▷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길고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계약종료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라이더나 택배기사 등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일반 근로자 대비 저조하므로 계약종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수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편 방안 마련 필요

- ▷ 정부가 구직급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구직급여 하한액 하향 등 고용보험제도 개편 방안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정부가 통계나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내부적 논의만을 거쳐 고용보험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총

실한 논의를 거쳐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3) 보험사기 근절 등 고용보험기금의 엄격한 관리 필요

- ▷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재정건전성이 낮은 상태이고, 많은 국민이 관여하고 있어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므로, 부정수급 등 보험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에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것

(4) 복수직업종사자(소위 “N잡러”) 보호를 위한 부분실업급여제도 도입,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의 검토 필요

- ▷ 복수직업종사자 중 가구 내 핵심 소득원인 4~50대 남성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분실업급여제도 도입,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 요건 완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을 검토할 것

(5) 외국인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관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 ▷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보험료 기여분보다 많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의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므로, 외국인 고용보험 제도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외국인력 통합평가관리 계획 수립 등 외국인력 정책의 범정부 차원 통합관리 필요

- ▷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를 위해 타 부처가 관리하는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되는 외국인력 통합 평가·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7) 위법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 합리화 필요

-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 등을 받은 사용자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3년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고용허가 취소·제한의 적용범위를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거주여건 및 인권 보호 방안 점검 필요

- ▷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은 1평 이내의 고시원을 숙소로 지정하고 있어 열악한 거주 여건이 문제될 소지가 있고 위급상황이나 성범죄 발생에 대한 보호 방안이 부실해 보이므로, 가사근로자의 거주여건 및 인권보호 방안을 점검할 것

(9)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 2024년도 예산안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10) 고용평등상담실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업의 지방고용노동청 이관 재검토 필요

- ▷ 정부는 고용평등상담실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감액하고 관련 업무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이관할 예정이나 인력 충원 등 업무 이관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 이관을 재검토할 것

(11) 고용평등상담실 업무의 지방고용노동청 이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 정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업무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할 예정인데, 현재 전국 19개 고용평등상담실에서 13,198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 지방청에 8명을 추가 고용하는 것으로는 과업 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행정관청에서 성추행·성희롱 등 내밀한 사건에 대한 진술이 위축될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 이관에 따른 내실 있는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12) SNS상의 부업 사기 방지 및 대응 방안 마련

- ▷ 현행 「직업안정법」은 구인을 가장한 부업 알선 등의 거짓 구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SNS에서 일명 부업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이 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부업사기 방지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13) 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장 점검 및 단속 필요

- ▷ 인력 부족으로 인해 조선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시급하나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6,764개소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 3,352개소에서 1만 3,000여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할 것

【노동 부문】

(1) 표준계약서 정비 등 보조출연자 불공정 계약 개선 필요

-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개선 등 후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출연자의 급여 수준이 낮고 급여의 지급시기 및 지급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정비하는 등 보조출연자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할 것

(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가 문제되고 있고 주4일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민간·지방자치단체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민간·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동자 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자 확대 필요

- ▷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58.8%에 그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할 것

(5)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강화 필요

-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교육을 확대·강화할 것

(6)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 배달 임금제 도입 방안 마련 필요

- ▷ 엔데믹 이후 배달노동자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무리하고 위험한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정 배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7) ‘새벽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규율 필요

- ▷ 새벽노동에 대한 규율이 없어 개인사업자나 근로자 등이 기존의 노동 외에 추가적인 새벽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므로, 새벽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화나 규율 등을 통해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8) 직장 내 갑질센터 관련 사업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이관에 따른 인력 충원 등 필요

- ▶ 정부는 직장 내 갑질센터 관련 사업을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로 이관할 예정이나 인력 충원 등 업무 이관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

(9) 노동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필요

- ▶ 정부는 노사관계, 노동시간 등 노동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
- ▶ 양대 노총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

(10)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위원장 등의 폭력 행사, 조합원 여부에 따른 일감 배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11) 코스트코 근로자 사망 사건 이후 근로환경 개선 조치 감독 필요

- ▷ 2023년 6월 코스트코 근로자 사망 사건 이후 의자 제공, 휴게시설 설치 등 산재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근로환경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감사 등을 통해 코스트코의 근로환경 개선 조치를 관리·감독할 것

(12) 코스트코의 단체교섭 회피 등 조사 필요

- ▷ 코스트코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코스트코의 단체교섭 불응 및 근로자 휴식시간 미부여에 대해 조사할 것

(13) 노·사 자율·자치의 원칙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최소화 필요

- ▷ 고용노동부가 특정한 범위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각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아 노동조합법 위반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도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노·사 자율·자치의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노동조합을 관리·감독할 것

(14) 개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탈퇴 권리 보장 등 정당한 노동활동 지원 필요

- ▷ 원주시지부, 안동지지부, 경북소방지부의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

동조합 탈퇴 결정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갑질, 횡포, 괴롭힘 등 탈퇴 방해 행위가 있었으므로, 소규모 노조의 독립과 정당한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15)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시정 필요

-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관련하여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

(16) 에스프로 도입 등 조선사의 상생협약 이행 독려 필요

- ▷ 정부와 조선업 원·하청사가 에스프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약 당사자인 원청 조선사 5곳 중 1곳(한화오션)만이 에스프로를 도입하는 등 원하청 조선사의 협약 이행이 부진하므로 협약에 참여했던 조선업 원하청에 대해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상생협약의 이행을 독려할 것

(17) 노동조합의 정치파업 등에 대한 엄정 대처 필요

- ▷ 노동조합의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한 파업에 대해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

(18)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 접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대부분이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임에도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도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정부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노사 부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19) 불합리한 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에 대한 지도 필요

- ▷ 2018년 한국철도공사 노사간 사실상 정당하지 않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개정이 있었으므로, 불합리한 한국철도공사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지도할 것

(20) 노동조합법 제2조와 관련하여 사용자성 확대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

- ▷ 노동조합법 제2조와 관련하여 사용자성 확대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21)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관리 필요

- ▷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자의 불성실한 노조활동 수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2) 공무원 노조의 비교섭사항에 대한 편법적인 단체협약 체결 시도에 대한 조치 필요

- ▷ 법원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조사관 증원, 상위직급 정원 확보, 승진 편차 해소 등을 ‘정책추진서’라는 명목으로 작성하여 편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것

(23)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지침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필요

- ▷ ILO가 공공기관 관련 예산운용지침 등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계속 알려 줄 것을 권고하였는바,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지침 수립 과정에 노조 참여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할 것

(24)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에 노동조합 포함 방안 마련 필요

- ▷ 노동조합이 기업을 압박해 타임오프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만 처벌받고 있어 노동조합이 타임오프제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에 노동조합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 공공기관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관련 전수조사 및 위법사항 고발 필요

- ▷ 서울교통공사 등 근로시간 면제 제도 악용 사례와 관련하여 전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배임죄로 고발할 것

(26) 노·사 자율권에 기반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감독 필요

- ▷ 개별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면제시간 수를 합의하면 그 합의한 시간은 특정 조합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고 노사간 자율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특정인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부 지침으로 근로시간 면제 관련 사항을 강제하는 것은 노사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27)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 필요

- ▷ 임금체불 사례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확대되고 있으나,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축소되고 있으므로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

(28) 위법 소지가 있는 취업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 필요

- ▷ 사내 집회 시 해고, 정치활동 금지, 3개월 이내 대기발령 경과 후 직무 부여가 없는 경우 자동 퇴직 등 단결권 및 정치적 기본권 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취업규칙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29)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2022년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액 규모가 1,223억원에 이르고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불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30) 생활체육업계의 부당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트레이너 등 생활체육업계 종사자가 외관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청 진정 등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업계의 부당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31) 정부의 임금체불 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임금체불 적발액,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 건수 및 임금체불에 따른 영장 발부 인원 및 신용제재 대상 인원 축소, 임금체불 사용자의 사법처리 비율 감소 등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실적이 부진하므로 정부의 임금체불 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2) 상습체불 근절 등 임금체불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임금체불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가 있으므로, 상습체불 근절 등을 통해 체불 임금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33) 간호인력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기획근로감독 등 실시 필요

- ▶ 간호인력에 대한 불법진료 강요, 협박,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기획근로감독과 병·의원 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

(34) 조선업 분야에서의 E-7 비자 입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하한선 회피 사례 예방 방안 마련 등 필요

- ▶ 국내 조선업 기업이 임금 하한선(전년도 1인당 GNI의 80%, 3년 이하 경력자에 대해서는 70%)이 적용되는 조선업 E-7 비자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입국 이후 기준 이하의 낮은 임금으로 다시 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외국인근로자가 약속된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 국가 신뢰도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확인·인증하

는 절차를 보완할 것

(35)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 확장 및 직장문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 주체나 사례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직장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6)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대우위니아의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 시스템 구축 등 임금체불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7)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한 택시 증차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법인택시회사가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택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증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8)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1년 단위 직원 고용 계약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 필요

- ▷ 공직유관단체인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

하기 위하여 1년씩 쪼개기 형태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여 시정조치할 것

(39) LH 건설 사업장의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행위 사례 전수 조사 및 시정조치 실시

- ▶ LH 인천 검단 현장의 임금 대리수령 및 외국인 불법 고용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전국 LH 건설 현장의 유사 불법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할 것

(40) (주)정법시대 등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 (주)정법시대는 근로자의 급여를 회사에서 임의로 인출하는 등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천공 운영 농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41) 현대자동차의 외근 영업사원에 대한 도촬 행위 노동법 위반 여부 검토 필요

- ▶ 현대자동차에서 외근 영업사원에 대하여 근무 확인을 위해 60일간 주차장에서 몰래 촬영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행위가 불법사찰, 인권침해, 노동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42) 고객 등에 의한 폭언 등으로부터 게임업계 종사자 보호 방안 강구 필요

- ▷ 「산업안전보건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폭언,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노동청의 감독이 필요하나 게임업계에서 고객에 의한 사이버 불링,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적 발언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에도 2021년 이후 해당 사항에 관한 게임업계 근로감독은 1건에 불과하므로, 특별근로감독 등 게임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43) 민원인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에 대한 조사 필요

- ▷ 근로감독관이 민원인에게 막말을 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각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관의 업무 행태를 세심하게 확인할 것

【산업안전보건 부문】

(1) SPC, DL이앤씨 등 반복적인 산재 발생 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2022년 SPC 계열사 및 사업체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기획감독이 이루어졌음에도 2023년 SPC 계열사 야니 사업장에

서 산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 ▷ 2023년 SPC와 DL의 각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2022년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는바, 고용노동부는 원인을 규명하고 산재 사망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 고객 등으로부터 배달라이더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배달라이더가 고객과 점주로부터 반말, 직업비하, 욕설, 부당한 업무 강요 등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배달라이더에게 고객 응대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배달라이더가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배달라이더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 필요

- ▷ SPC, DL이앤씨,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는 등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중대재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관할
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 중단 등에 대한 조사 등 조치 필요

- ▶ 2023년 3월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56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음에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특별근로감독 종료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중단하였고, 최근 3년간 세아베스틸에 대한 안전감독을 7회 진행하면서 10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만을 적발하는 등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였는바, 군산지청의 안전감독 실태조사 및 작업중지명령 중단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할 노동청장 등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

(5) 쿠팡 물류센터 온열질환 발생 관련 정부의 관리감독체계
재점검 등 대책 마련 필요

- ▶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 및 쿠팡의 자체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온열질환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체계를 재점검하고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온열질환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온열질환 관련 조치 사항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산재를 독립된 직업병으로 분리·관리하는 방안 마련 필요

- ▷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18명으로 보고 있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38건의 뇌심혈관, 심장질환 사망 사례에 대하여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직업병 코드를 부여하는 등 고온다습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산재를 기존 온열질환에 따른 산재와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고용노동부 제재처분 회피 사례 조사 및 관리 체계 정비 필요

- ▷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신규법인 설립 등을 통해 제재처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현재 지정된 안전관리 전문기관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관리 시스템을 정비할 것

(8) 온열질환에 따른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필요

- ▷ 건설업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온열질환 관련 보호 조치는 공장 내부 작업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건설업 사업주에게 온도·습도 조절 의무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물, 휴식, 그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열사병 3대 이행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의무와 사업장 내 온도·습

도 조절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

(9) 건설현장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갈탄, 숯탄 등 사용 금지 필요

- ▶ 최근 5년간 건설업 사업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갈탄, 숯탄 등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물의 사용을 금지할 것

(10) 건설현장 폭염·혹한 대비 장치 설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인상 필요

- ▶ 건설현장에서 폭염·혹한에 대비하여 대형 선풍기, 전기 온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인상할 것

(11)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준비 필요

-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예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인력 교육·양성 등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2) 2023년 8월 샤니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엄정 수사 필요

- ▷ 고용노동부는 2023년 8월 SPC 그룹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동료 노동자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실수를 유발하게 된 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3)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 확대 필요

- ▷ 2023년 8월 샤니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식품 가공용 볼 리프팅기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도 기인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럽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를 확대할 것

(14)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필요성 검토 필요

- ▷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법령위반 여부 등 회사의 정상 운영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5) 민간 건설현장에서의 TBM(Tool Box Meeting)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 DL이앤씨에서 근로자가 TBM(Tool Box Meeting, 작업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의 내용과 안전 작업 절차 등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사망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 TBM 관련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6) 산재 역학조사 지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필요

-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재 승인 대기 중 사망자가 111명이 고, 2023년 처리된 역학조사 소요일은 안전보건공단 1,072일, 근로복지공단 581일에 달하고 있으므로, 역학조사 지연 처리에 대한 연구용역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고, 국회 보고 후 미진할 시 감사원 감사 등 조치할 것

(17) 산재 판정 기준에 규범적 인과관계 명시, 산재 조사기한 설정 등 산재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 의학적 인과관계에 따른 산재 판정, 산재근로자의 산재 미인식, 산재 조사기간 장기화로 인해 산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재 판정 기준을 규범적 인과관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의 산재신고를 허용하며 산재 조사기한을 설정하는 등 산재근로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 코스트코 사망 사고에 대한 초동 조사 지연에 대한 관련

자 징계 조치 필요

- ▷ 코스트코 사고에 관하여 산재 발생 시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0일이 경과한 뒤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관련자를 징계 조치할 것

(19) 코스트코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필요

- ▷ 코스트코는 2016년~2022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았고 산업안전감독도 8년 중 5년간 시정조치가 없었던 것이 산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코스트코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

(20) 산업단지 내 공동휴게실 설치 사업 적극 추진 필요

- ▷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곳에서의 휴게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장 실사 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단지 내 공동휴게실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1)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 필요

- ▷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으므로,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2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 수사 지체, 소극적 압수수색으로 인한 수사 장기화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례 축적이 미진하므로, 적극적인 압수수색 신청 등 수사업무를 효율화하고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3) 유해인자 인정 범위 확대 등 태아산재 도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태아산재를 법정화하는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태아산재 인정 사례가 없는 등 태아산재 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태아산재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며 태아산재 소급인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태아산재 도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4) 세아베스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 작년부터 총 4명이 사망한 세아베스틸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위험한 작업현장에 노동자를 투입한 경위와 신규 보호구 구매 여부, 방연복의 정상적인 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경위와 세아베스틸에 대한 걱정한 근로감독 및 안전감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할 것

(25) 양대노총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 배제 철회 필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한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의 노동자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노정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양대노총의 위원 추천권 배제 방침을 철회하고 양대노총과의 대화 방안을 마련할 것

(26) 산재 직영병원의 장기 요양환자 관리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 이행 필요

- ▷ 근로복지공단 일선 지사에서 진료실적 확보 목적으로 일반병원 산재 환자가 공단 직영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유도하고 환자에게 재활 특진, 입원 연장 등을 권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기금 누수가 우려되므로, 단순 상병인 산재환자의 장기 요양 현황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전원 유도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서 근무한 직원이 본부 보상부장으로 전보되는 등 공단 본부의 병원에 대한 감독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7)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하위규정 구체화 필요

-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10개월이 넘었음에도 실효적인 세부규정이 미비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입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하위규정을 마련할 것

(28) 쿠광의 산업재해 은폐 사건의 형벌 사항 해당 여부 조사
필요

- ▶ 쿠광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은폐와 관련하여 모두 산재 미보고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9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은폐행위를 산재 미보고와 은폐로 분리하여 각각 과태료와 형벌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쿠광의 산재 은폐 사건들이 형벌 부과 사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

(29)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파킨슨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재검토 필요

- ▶ 법원이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파킨슨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법무부의 소송지휘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여 구제가 지체되고 있으므로,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항소를 재검토할 것

(30) 쿠광CLS 소속 킥플렉서 사망사건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
부 조사·감독 실시 필요

- ▶ 쿠광CLS 소속 킥플렉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킥플렉서의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고 쿠광CLS의 산업안전보건법령·근로기준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감독할 것

(31) 승강기 노동자 근로환경 조사 및 현장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전국 승강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및 2인 1조 작업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32) 산재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산재 관련 직원 증원 필요

-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 수행 직원을 증원하여 산재 관련 서비스가 부실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할 것

(33) 기업의 자발적인 작업중지 실시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 ▷ 작업중지 제도의 우수 사례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기업이 적극적·자발적으로 작업중지를 실시하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

(3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 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명확한 업무 영역 설정 필요

-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간의 모호한 업무 분담으로 인해 기업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있고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기관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 규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5) 5인 미만 농업 사업장의 농업인 산재보험 적용 필요

- ▷ 농업인 재해 발생 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5인 미만 농업 사업장의 농업인 보호를 위해 이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산재보험 적용 제한 규정을 개정할 것

(36) 산재원인 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수사와 원인조사의 분리 등 제도 개선 방안 강구 필요

- ▷ 재해조사의견서가 현재까지 처벌 중심의 조사의견서였고, 그 때문에 법령의 취지인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므로, 처벌 목적의 조사와 산재예방을 위한 원인 조사를 분리하고 이를 위해 관련 조직을 상설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37) 불합리한 산재 불인정 결정 방지를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 필요

- ▷ 과로와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기준을 고시로 규정하였음에도 인과관계에 관한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산재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일률적인 기준 설정으로 인해 명백한 과로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업무부담을 가중하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고온이 포함되지 않아 온열질환에 대한 재해 인정이 어려우므로, 이를 반영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것

(38)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인정 및 예방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산재 예방 설비 기준 마련이 지체되었고, 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하여 유해인자 노출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재를 불인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급식시설 노동자의 폐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재 인정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유해인자 노출을 작업 중지 요건에 포함시키며 작업환경 측정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흡 포함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급식 노동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39) 콜센터의 재해 예방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 필요

- ▷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일하는 콜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콜센터의 재해 예방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것

(40) 쿠팡의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참여 유도 필요

- ▷ 쿠팡은 배달기사의 직접고용을 이유로 택배업 종사자 과로사 관련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회사인 쿠팡CLS의 배달기사에게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하여는 배달기사가 개인사업자라는 사유로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토

교통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쿠팡이 택배업 종사자 과로사 관련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

(41) 영세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지원 필요

-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휴게시설 미설치 비율이 7%에 달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한 휴게시설 설치 강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영세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4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래전문기술원 설립을 위한 수도권 건물 매입에 대한 엄정한 조치 필요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미래전문기술원의 설립을 위해 수원시 소재 건물을 매입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청사 등의 수도권 신설을 제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어긋나고, 전자산업 안전보건센터 등 산재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

【통합고용·청년고용 부문】

(1)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축소에 대한 재검토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면서도 사회문제 해결, 안정적인 고령 일자리 제공 등 효용이 있는 사업인데도

정부는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지원 축소에 대해 재검토할 것

- ▷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갑작스러운 폐지는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며 사회적기업을 시작한 사람이나 그런 기대로 취업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중 창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기업의 재투자를 고려할 때 저조한 정량평가 결과로 성과가 낮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40여 개 민간위탁기관의 330여 명이 일자리가 영향을 받으므로,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축소를 재고하거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확대 필요

-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의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용으로, 지원 축소 시 사회적기업의 투자를 약화시키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를 확대할 것

(3)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수립 필요

- ▷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가 크지 않고 사회적기업의 사업이 노인일자리아로 변질되는 측면이 있으며 사회적기업가 육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할 것

(4) 장애인고용컨설팅업체의 위법행위 조사·점검 필요

- ▶ 장애인고용컨설팅업체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체와 장애인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알선하면서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회피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므로, 장애인 고용 관련 컨설팅업체의 위법행위를 조사·점검할 것

(5)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재검토 필요

- ▶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다른 중증장애인에게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고, 상담을 제공하는 장애인이 보람을 느끼는 일자리이므로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것

(6)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축소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신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데, 평균 고용유지율과 집행률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등 실적이 우수하므로 사업 축소를 재검토할 것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필요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은 기업 중 3,041곳이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 5,335명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었으므로,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보를 강화할 것

**(8) 근로자의 자유로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 ▷ 최근 6년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관한 사업주의 법령 위반 적발건수가 6,000건을 초과하는 등 근로자가 육아 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활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제도 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
필요**

- ▷ 2022년 국정감사 이후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주의 시행계획 등의 게시 의무 이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가 없고 남녀 차별에 관한 개선사항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10) 경북 북부 지역 중장년내일센터 설치 검토 필요

- ▷ 정부 정책 수혜의 지역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북 북부 지역에 중장년내일센터 설치를 검토할 것

【직업능력 부문】

(1) 물류직종 직업훈련 현장실습장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 물류직종 직업훈련 현장실습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점검이 미비하고, 실습장 운영 사업체가 위조 사문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사업 수행을 승인받는 등 고용노동부의 물류직종 직업훈련 실습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물류직종 직업훈련 현장실습장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 ◀

(1) 권리구제대리인제도 이용률 및 권리구제율 제고 방안 마련

- ▷ 중노위의 권리구제대리인제도는 이용 노동자의 수가 2,500명에서 3,000명 이내로, 권리구제율은 60% 이내에서 매년 정체되어 있으므로, 이용률 및 권리구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 기준 필요

- ▷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능력을 갖춘 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전공노와 지부 간 탈퇴 문제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중노

위의 적극적인 감독 필요

- ▷ 최근 전공노를 탈퇴하기로 결의한 안동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전공노가 자체 규약으로 안동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권한을 정지하고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

(4)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조치 필요

- ▷ 대부분의 사건이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집중되어 있고 업무량 또한 급증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화해·조정 기능 확대,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조사관 증원, 업무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

(5)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기관감사 실시 필요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협의를 중용하거나 사용자측 노무사에게 노동자측의 증거자료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등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이 드러났으므로 기관감사를 실시할 것

(6) 노동위원회 중립성 보호를 위한 신중한 언행 필요

- ▷ 중립적인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단체행동권 행사 수단인 파업을 우리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주는 행위로 오인할 수 있

게 하는 영상을 제작·배포·홍보한 것은 부적절한바,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을 신중히 할 것

(7)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차별시정제도의 호응도나 신청률이 떨어지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자 확대, 불리한 처우 관련 정보비대칭성 해소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정신청 접근성을 제고하여 차별시정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판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받아들여 사측 관리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최저임금위원회 ◀

(1) 사회통합 등 최저임금의 기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필요

- ▷ 물가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아 실질가치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이 줄어들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에 압박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사회통합 및 불평등 조정 등 최저임금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

(2) 단일화된 최저임금 체계 및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필요

-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숙련노동자 고용 축소, 지하경제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단일화된 최저임금 체계에서는 지역 물가, 생계비 등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기업의 자본 손실을 초래하고 근로자 고용 확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단일화된 최저임금 체계 및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

(3) 최저임금 결정의 독립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정부 고위인사의 최저임금 산식에 관한 발언이 보도되는 등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또는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결정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국회에 보고 후 미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 ▷ 2023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취소율(구제율)이 5%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은 14.5%에 달하며, 재심사 사건 1건당 심리시간이 평균 4분에 불과하고 심사위원이 의료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인과성 판단 기준이 의학적 기준에 치중되어 있는 등 심사가 부실하고, 기관의 현원 대비 과다한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조직 운영도 부적절하므로,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국회에 보고 후 미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1) 방송 장악 관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재조사 필요

- ▷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관련 로드맵 등 소위 ‘방송 장악’ 관련 문건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신뢰하기 어렵고, 언론사 관련 부당노동행위 조사가 타 사건과 비교할 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

(2) 서울교통공사의 부당한 타임오프제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문제해결방안 마련 필요

- ▷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시간 면제 인원 및 면제 시간한도를 초과하여 타임오프제를 운영하고, 노조 전임자가 없음에도 파트타임 인원이 전임자처럼 행동하며 출근하지 않는 정황이 나타나는 등 불법

적인 타임오프제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3)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노사 분쟁에서 노동청의 적극적 중재 역할 필요

- ▷ 페르노리카코리아에서 단체 협약 해지 및 노조사무실 폐쇄 등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할 것

(4) 가네보코스메틱 코리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 실시 필요

- ▷ 가네보코스메틱코리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가 근로감독을 청원하였으나, 고용노동청이 개인의 권리구제 사안으로 판단하여 진정으로 처리하였음. 청원인의 권리구제 절차가 마무리되어 2024년 2월 15일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5)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중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때 피해자를 추궁하는 사례가 있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6) LG디스플레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 ▷ 최근 LG디스플레이 직원 자살의 원인이 장시간 근로와 잘못된 조직문화 등으로 밝혀졌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 보상휴가임금 미지급 사실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LG디스플레이의 부당한 조직문화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추가로 조사할 것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1)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체불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필요

- ▷ 대유위니아는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룹 회장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비상식적인 자산 매입 등 부실한 경영을 유지하여 임금체불 사태를 발생시켰고 임금 지불능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중부지방청장 및 광주지방청장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청산 지도 등 체불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2) 대유위니아 회장의 직접적인 기업경영 관여 정황을 고려한 임금체불 사건 수사 필요

- ▷ 대유위니아의 주요 재산 매각 과정이나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박영우 회장의 주도 아래 자녀에 대한 자산 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직접 기업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

할 것

(3) 군포 쿠팡 킷플렉서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 ▶ 군포 쿠팡 킷플렉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야간근무 고려 시 주당 67.6시간의 과도한 근로시간, 1년간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

(4) 하남 코스트코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공정·신속한 수사 필요

- ▶ 하남 코스트코 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사망자 동료에 대한 참고인 조사 중 사측 변호사를 입회시키는 등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조치가 있었으므로, 향후 수사 원칙을 지켜 신속하게 수사할 것

(5) 평택 PCTC와 하청업체 PCM의 고용승계 분쟁 관련 부당 노동행위 조사 필요

- ▶ 평택 PCTC와 하청업체 PCM 사이의 고용승계 분쟁과 관련하여 PCTC의 노조 간부 대상 고용승계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6) 원청과 하청노조간 고용승계 등 분쟁 발생시 지방고용노동

청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 ▷ 평택 PCTC와 하청업체 PCM 사례와 같이 원청과 하청노조의 고용승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계 관청이 원활한 협상을 위해 조력하였음에도 협상이 지체되는 경우 상위 관청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7) 지방도로 주차관리요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사 사고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강원도 정선군에서 주차관리요원 2명이 사망한 사건은 중대재해 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유사 업무를 하는 지방도로의 노동자들이 동일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찰과 함께 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8) 인천 노동자 투신자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필요

- ▷ 장애인 지원기관인 ‘좋은친구들’ 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투신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이 유서에 대표와 이사 1인의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 및 조사를 할 것

(9) 코스트코 노사의 원활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력 및 코스트코의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

- ▷ 코스트코는 사측의 단체협약 교섭 거부로 인해 단체협약이 4년간 체결되지 못하고 있고, 휴식시간 부여, 휴식공간 설치 등 법률상 의무에 관한 사항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관한 원활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코스트코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10) 지방고용노동청별 목표치가 포함된 임금 체불 감축 계획 수립 필요

- ▷ 2023년 8월 말 기준 체불임금이 1조 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특히 중부청의 임금 체불 증가율은 47%로 가장 높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노동청별로 임금 체불 감축 목표치가 포함된 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1) 조선업 퇴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 홍보 필요

- ▷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경우 유해물질에 노출된 시점부터 진단일까지 일반적으로 약 10년의 잠복기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조선사의 경우 퇴직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한 조선업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2)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 ▶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지난 10개월간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중대재해 3건이 발생하였는데 설비 노후화가 해당 재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사측의 원인 개선과 사측과 유족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청이 사건에 적극 개입할 것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1) 대구 지역노조의 탈세 및 기부금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 ▶ 대구의 한 지역연대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조원들이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야 될 성과급을 공익법인으로 기부하게 하고 노조 지회를 통해서 노조원들에게 우회 지급하여 소득세를 탈세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한 지역노조가 생활폐기물협회 소속 업체들에 기부금을 내도록 강압·강요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할 것

(2) 티케이케미칼 정리해고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 흑자경영과 상당한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티케이케미칼이 일부 사업부의 적자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였다는

주장이 있고,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법 사항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부실 조사 개선 필요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유위니아 관련 체불 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대유위니아에 대한 단 한 건의 근로감독만 실시하는 등 체불에 관한 조사가 미비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

- ▶ 충청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대규모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므로, 퇴직자 재취업 대책 마련 등 일자리 전환과 지역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공통사항 ◀

(1)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필요

- ▷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에 대하여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폴리텍,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강등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할 것

(2) 중대 징계 사안에 대한 표창 감경 부적절

- ▷ 중대한 비위나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표창을 이유로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법령에 따른 국기게양·관리 필요

-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청사의 국기봉의 형태나 높이, 게양 형태가 현행 법령이 정하는 바와 맞지 않고 국기봉의 오염도 또한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각 기관장은 국기법에 따라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이를 바로잡을 것

▶ 근로복지공단 ◀

(1) 산재판정 지체 등으로부터의 산재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운영에 관한 개선조치 마련 · 이행 필요

- ▶ 역학조사 장기화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산재 은폐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제도 운영 개선 추진, 역학조사 전문기관 확대,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직업환경연구원 등 역학조사기관의 인프라 강화 등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 · 이행하고, 국회 보고 후 미진할 시 감사원 감사 등 조치할 것
- ▶ 산재 승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주의 항소 및 산재 취소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산재 판정 대기 중 사망자가 7년간 367명에 이르는 등 산재근로자의 피해가 있으므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선보상 후변제 지원체계를 갖추고 법원 1심 판결을 수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첨단산업 노동자의 희귀질환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도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타당해 보이면 산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2017년 대법원 판례 법리에 충실하게 산재를 승인하고, 산재 주무기관의 판단에 반하는 법무부의 항소 지휘에 대해 재검토 요구 절차를 마련할 것
- ▶ 재해 판정 절차의 중복성과 복잡성으로 업무상 질병의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산재보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 및 대상을 확대하고 추정외 원칙 적용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근로복지공단 인력 증원 및 직원 처우 개선 필요

- ▷ 근로복지공단과 타 공공기관과의 임금 격차가 크고 근로복지공단 신입 직원의 1년 이내 퇴사율이 13%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과 타 공공기관과의 임금 격차 해소 및 인력 증원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 근로복지공단 민원 접수 건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현황에 비해 인력 증원이 미흡하므로,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 ▷ 공단의 처리사건 건수 급증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3)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근로자와 고용노동부 본부 공무원 근로자 사이의 차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근로자와 고용노동부 본부 공무원 근로자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나 임금과 복리후생에 차별이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4) 근로복지공단의 과격민원 대처 방안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 방안 마련 필요

- ▷ 과격·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대처 방안 및 공단 결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

(5)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705개가 휴·폐업하고 의료법 위반,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이 1,000여 건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가 부실하므로,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지정 기준 심사를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6)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중 응급실을 운영하는 8개 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고, 3곳에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확보되어 있으며 의사 부족으로 인한 휴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퀵서비스 종사자와 배달노동자의 산재 통계 분리 필요

- ▷ 퀵서비스 종사자와 배달노동자는 일하는 시간대, 산재의 다발성, 거리 등 근로환경이 상이하므로, 산재 관련 통계를 분리하여 작성·관리할 것

(8) 건강보험기금·산재기금간 요양급여 정산 시 진료비용 총액에 대한 일괄 정산 도입 필요

- ▷ 현재 산재승인 이전 및 산재 요양 종결 후 2년간 치료에 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 진료 건별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기금으로 정산하고 있어 정산 과정이 비효율적이므로, 진료비용 총액에 대해 일괄하여 정산하는 형태로 이를 개선할 것

(9) 산재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연계 등 추진 필요

- ▷ 치료비 지급, 진료비 심사 등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전산 연계를 추진하고, 진료비 심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배전노동자 직업성 암 판정 지연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근로복지공단이 배전노동자의 직업성 암에 대한 판정을 지연하고 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재해 노동자의 건강 및 피해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배전노동자의 직업성 암 판정 지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쿠팡 영업점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현황 전수조사 필요

- ▷ 쿠팡CLS의 택배영업점인 새마을물산에서는 택배기사 사망 후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 관련 신고가 이루어졌고 제주지역

물류센터 위탁업체인 제주한백TLS에서는 1,652명의 보험신고가 누락되는 등 구광 영업점에서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관리가 부실하므로, 구광 영업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 조사할 것

(12)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율의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한 판정 기준 개선 필요

- ▷ 소음성 난청의 산재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율이 저조한 지역(광주, 대전)이 나타나는 등 산재 승인율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재 판정 기준을 개선할 것

(13) 현장실습생 산재 관련 교육부와의 업무 교류 강화 및 산재예방 지원 필요

- ▷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실습생 산재 통계와 교육부 통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등 교육부와의 업무 교류가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교육부와의 업무 교류를 확대·강화하고 현장실습생 산재 예방을 지원할 것

(14) 외국인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산재 제도개선 등 조치 검토 필요

- ▷ 외국인근로자의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산재 대리 신청권을 각국 대사관에 부여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전담상담사 채용 및 전용 콜센터 설치를 검토할 것

(15) 업무로 인한 자살 발생 시 유족에 대한 산재 신청 권한 고지 필요

- ▷ 경찰이 직업 및 업무 문제로 인한 자살 사건을 인지한 경우, 유족들에게 산재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산재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유족들이 산재신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16) 산재 발생의 환경적인 요인 등을 산재 관련 데이터로 분류하는 등 산재 자료 분류 기준 세분화 필요

- ▷ 산재 관련 데이터는 산재 예방 및 보상 개선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가 상해·사망에 이르게 된 환경적인 요인을 병기하는 등 산재 자료 분류기준을 세분화할 것

(17) 간병급여 현실화를 위한 간병급여 인상 계획 수립 필요

- ▷ 간병급여 지급액이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병급여 인상 계획을 수립할 것

(18) 산재병원 인프라가 부족한 경북 북부지역에 산재병원 설치 검토 필요

- ▷ 산재병원은 지역 내 거점병원, 상급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꾸준히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산재병원 인프라가 부족한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산재병원 설치를 검토할 것

(19)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집무실 규모 조정 필요

-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집무실이 과도하게 넓으므로,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

(20) 지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인정률 편차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간의 산재인정률 차이가 20%p 내외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인정률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1) 대지급금 사업주 변제금 회수 업무 개선 필요

- ▷ 최근 3년간 대지급금 사업주 변제금 회수율은 25.6%에 그치고 미회수 채권관리액이 3조 3,000억원에 이르는 등 변제금 회수 업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며 변제금 회수 업무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것

(22) 신규가입자로 제한된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삭제 검토 필요

-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6개월 이상 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회보험료 지원 실적이 저

조하므로, 사회보험료 지원 시 보험가입 이력 요건의 삭제를 검토할 것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정한 내부 실적 평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기관 전체의 정부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함에도 비서실, 경영기획실, 감사실 등 특정 부서의 내부 평가 등급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내부 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종합진단 활성화 필요

- ▷ 안전보건종합진단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22년 안전보건종합진단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17%에 그치는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한 안전보건종합진단 실적이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18세 미만 배달라이더 대상 재해예방 대책 마련 필요

- ▷ 18세 미만 배달라이더 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 다발 지역 안내 등 재해예방 대책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것

(4) 석면 해체·제거 업체 모니터링 강화 필요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감리인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산안법상 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현장 대비 모니터링을 실시한 현장의 비율이 낮으므로(34.2%) 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안전성평가 등급 하위 업체(C, D, 무등급)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비율 상향이 필요하며, 석면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일정을 업체와 사전 협의가 아닌 불시에 확인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쿠팡 새벽배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마련 필요

- ▶ 쿠팡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험노동시간 기준 설정, 건강진단 실시, 사용주에 대한 권고사항 마련 등 산재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6) 3D프린터의 유해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추가 연구 진행 필요

- ▶ 인사혁신처는 3D프린터를 수업에 사용하다 암이 발생한 과학교사의 공무상 재해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하였는데, 3D프린터 사용의 유해성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므로, 3D프린터의 유해성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를 재실시하고 추가 연구를 진행할 것

(7) 산재사고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공개 필요

- ▷ 산재사고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는 산재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므로, 산재사고 발생 시 조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

(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내년도 지원 물량이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므로, 실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컨설팅 수행 인력 확보나 관련 규정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9)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DL이앤씨에 대한 관리·감독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DL이앤씨 관련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DL이앤씨에 대한 자체심사 및 확인 면제 업체 지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현장감독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물적분할된 회사에 대한 자체심사 및 확인 면제 사업장 지정의 효력 승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대림과 DL이앤씨와 같이 자체심사 및 확인 면제 사업장으로 지정된 회사가 물적 분할을 통해 별개 회사가 되는 경우 확인 면제 사업장 지정의 효력을 승계하면서도 분할 전 회사의 사망 사고에 관한 사항은 승계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산재 전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1)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등 필요

- ▷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하위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경영책임자의 혐의 입증에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재해조사의 견서도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심사 점검·개선 필요

- ▷ DL이앤씨, 샨니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증·심사 절차를 점검·개선할 것

(13) 산재 발생 현황의 유관기관 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 ▷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와 해당 지역 공단 지사에만 관련 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산재 사망사고 현황이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 타 지사 등 관련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시험감독위원 위촉 절차의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 가족 등 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시험감독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시험감독위원 위촉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 시험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가 많아 관리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시험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관련 진행 상황 점검 필요

-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2월 내에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인 고용허가제 선발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실시가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필리핀과의 협의 상황을 포함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할 것

(4) K-move 스쿨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 ▷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 취업과 연계하는 K-move 스쿨 사업은 투입예산 대비 1년 이상 장기고용률이 낮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성과 제고 및 사후관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5) 자격시험 업무 과정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 자격시험에 대한 관리 부실로 답안지 파쇄사고가 발생하였고공단 직원의 가족들이 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 장애인 선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필요

- ▷ 기업이 장애인 선수를 재고용하는 사례가 없어 은퇴 이후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장애인 선수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집합교육 방식의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필요

-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명단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교육 효과가 높은 집합교육의 방식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게 할 것

(3) 장애인 고용 컨설팅 업체의 부적절한 고용알선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장애인 고용 컨설팅 업체의 부적절한 고용 알선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4) 공단 이사장의 허위보고와 갑질 문제에 대한 조치 필요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공단 직원의 휴가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바와 달리 운영하였고, 공단 내 신임·전보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해 일부 기관장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회의 종료 후 별도로 호출하는 등 갑질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것

(5)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 개선 계획 마련 필요

-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과 모기업의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6)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10% 자부담금 부과 재검토 필요

- ▷ 2024년부터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및 보조공학기기 남용 등을 이유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자부담금 10%가 부과되는데,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었고 심사·관리시스템 개선 등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없었으므로, 해당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조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보고할 것

(7) 근로지원인의 자격요건에 비해 낮은 처우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근로지원인의 지원자격 기준 대비 낮은 임금조건으로 근로지원인 공급이 부족하고 고령화되는 추세이므로, 근로지원인의 자격요건에 맞는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교육부·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 2022년도 공공부문 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기관들 중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교육부 기관들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들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교원 채용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9) 지역별·산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의무고용제 개선 필요

- ▷ 현재 장애인 교원 부족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교육청처럼 다양한 산업현장의 특성과 복잡한 경영 여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기관·기업이 있으므로, 지역별·산업별·기업별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정비할 것

(10) 장애인 상시근로자 기준인 월 소정근로시간 요건 강화 필요

-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 ‘상시근로자’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로 보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짧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강화할 것

▶ 한국고용정보원 ◀

(1) 고연령층 및 중장년층을 고려한 정보보호 대책 마련 필요

- ▷ 한국고용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고용정보원이 보안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워크넷에 도입한 PASS 및 카카오지갑 인증 조치로 인해 정보접근이 어려운 고연령층이나 중장년층의 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 측면이 있으므로, 고연령층 및 중장년층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2) 워크넷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 워크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신속히 보상할 것
- ▷ 워크넷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전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용정보원의 보안체계와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신중 해킹

수법 대응을 위한 해킹 방어 능력을 제고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1) 교직원 출신 학장의 임기 종료 후 교직원으로의 복귀 근거 마련

- ▶ 한국폴리텍 정관상 교원이 학장으로 임용된 후 임기가 종료된 경우 교원으로 복귀할 수 있으나, 교직원이 학장으로 임용된 후 임기 종료 시 교직원으로의 복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교원과 교직원 사이의 차별이 있으므로, 교직원이 학장에 임용된 경우 그 임기 종료 후 다시 교직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

(2)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다문화 청년 대상 교육 사업의 전면 재검토 필요

- ▶ 다문화청년 대상 교육 사업은 다문화청년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사업수행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것

(3) 폴리텍의 반도체 학과에 대한 부실한 투자계획 점검·개선 필요

- ▶ 폴리텍은 반도체 학과 신입생 충원률이 낮음에도 구체적인 투자 근거 없이 타 학과에 비해 신설·개편을 위해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반도체 학과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 필요

- ▷ 미편성된 예산의 집행(학교 정문 교체), 타 사업의 예산 사용(미래학습관 건립), 국유재산 무단처분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예산 집행에 대해 점검할 것

▶ 건설근로자공제회 ◀

(1) 건설근로자 기능훈련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건설근로자 기능훈련사업은 현장에 필요한 직종인 형틀·목공·배관 기능에 대한 훈련 실적이 미흡하고 훈련생이 취업 의사 없이 훈련 참가비만 수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인력수요가 높은 기능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취업 실적을 점검하는 등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규모의 단계적인 조정 필요

- ▷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사회적기업 관련 종사자 및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

▶ 한국잡월드 ◀

(1) 한국잡월드 파트너즈 대표이사 선임 필요

- ▷ 한국잡월드의 자회사인 한국잡월드 파트너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대표이사가 공석이므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

(2) 한국잡월드와 한국잡월드 파트너즈 근로자 사이의 상여금 등 차별 시정 필요

- ▷ 한국잡월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에도 모자(母子)회사 근로자 사이의 복지포인트, 식대, 상여금 차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3) 기상청 소관

▶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 ◀

【기상예보의 정확도 제고 및 기상서비스 개선 관련 사항】

(1) 단기예보의 지역과 시간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기상청의 단기예보가 5km,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였음에도, 이로 인해 국민의 단기예보에 대한 신뢰도가 2018년 73%에서 2022년 66.8%로 하락하였으므로, 지역과 시간 범위 설정을 재검토할 것

(2)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예측 정확도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 국지성 폭우 등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술개발 노력 등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재난문자 오류 수정 및 관련 기관과의 발송 기준 협의 필요

- ▷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 직접 발송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재난문자 대상 지역 주민이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지역 오폭기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정확한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오류를 수정하고 서울시와 다르게 설정된 문자 발송 기준을 협의하여 조정할 것

(4)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정상화 필요

-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정보 생산 원가 대비 낮게 책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를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5) 우박 관련 대응체계 마련 필요

- ▷ 우박 관측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현재 지상에서 목측(目測) 및 기계장비로 우박을 관측하고 있어 정확도가 낮으므로, 우박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6) 이안류 및 너울 대응체계의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 기상청의 이안류 예보 기간에 비해 국립해양조사원의 이안류 관측 기간이 짧고, 기상청의 예측지점과 국립해양조사원의 관측지점이 일치하는 곳이 적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 발생 장소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안류 예보가 8개 해수욕장에서만 이루어지는 바 이안류 예보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는 등 이안류 대응체계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 너울 예측정보가 동해안 19개 지점에 한하여 제공되고, 너울 피해 예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 미흡하므로, 너울 예측정보 제공 지점 확대를 포함한 너울 대응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7) 기상용어 표현의 통일 필요

- ▷ 집중호우, 장마라는 표현 외에 극한 호우, 극한 강우 등의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용어를 정하여 언론과 기상청이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시킬 것

【기상 인력 관련 사항】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방안 마련 필요

- ▷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상청 조직 개편과 예산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용역 결과를 보고할 것

(2) 방재기상지원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대응을 위해 방재기상지원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일본의 기상방재감과 같은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직제를 개편하는 등 방재기상지원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 긴급문자 발송사업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 필요

- ▷ 긴급문자 발송 시범 사업에 필요한 6명의 인력은 현재 정규 직제

가 아닌 지방기상청·센터의 일부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인력의 정식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4)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상시조직화를 위한 노력 필요

- ▷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조직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구인력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시조직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탈 인력 보충과 상시조직화를 위해 노력할 것

【기상 장비 관련 사항】

(1) 중국산 악성코드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 필요

- ▷ 국내에 설치된 중국산 기상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됨에 따라 데이터 변조, 악성코드의 유포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보당국과 협력하여 내부 구성품도 검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보안검사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 기상관측선 건조 방안 검토 필요

- ▷ 현재 운영되는 기상관측선이 1대에 불과하고 규모가 작아 복무하는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이 열악하므로, 기상예보의 정확성 증진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기상관측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해저지진계 및 관측장비 확보 계획 마련 필요

- ▷ 해역 지진 감시 능력 증진을 위해 해저지진계, 관측장비 등 지진 관측망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기상행정 및 감시·감독 관련 사항】

(1) 기상정보 유통 관련 관리·감독 철저

- ▷ 기상예보사업자가 아닌 회사가 부정확한 기상정보를 유통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한 기상정보 유통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연구 용역업체의 보고서 표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 ▷ 기상·지진 See-At 기술 개발 사업 보고서와 관련하여 표절 위험 인지 및 중복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구 용역비용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한편 참여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등 연구용역 과제 부실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

(3) 부정당 업체와 지속적인 계약 체결에 대한 개선 필요

- ▷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과 연계된 다른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진관측장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관인 무단 도용 인력에 대한 조치 필요

- ▷ 기상관측선 승무 인력 일부가 국립기상과학원장의 관인을 무단 도용하여 부적절하게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기타 사항】

(1) ODA 관련 국산 장비 활용방안 고려 필요

- ▷ ODA 사업 중 일부 기상장비의 경우 외산을 구입하여 ODA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 기상장비의 ODA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2) 남북기상협력 관련 자문단 운영 방식 신중한 검토 필요

- ▷ 남북기상협력자문위원회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자문회의의 자문기능 수행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남북기상협력 관련 자문단 운영 방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R&D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사업 등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삭감된 R&D 예산의 경우 연속사업 용역 업체와의 신뢰 유지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상청은 기획재정부와 삭감된 R&D 예산의 증액을 협의할 것

- ▷ 기상재해 사전 대비 사업, 기상관측장비 사업, 지진·해일·화산 감시 사업은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 대비 2024년 예산안에서 삭감되었는데, 중국·일본 등 인접 국가의 지진 발생 진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R&D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범국민적 우려가 있으므로, 백두산 분화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화산 및 지진 예측, 기상재해 사전 대비 중심의 시공산 통합수치예보 사업,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 등 관련 R&D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 기상청의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 개발 관련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상용화 계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4) 산사태 등 재난유형별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강화 필요

- ▷ 기상청의 예보가 산사태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유기적인 재난 예방 및 수습을 위해 기상청은 일반적인 기상정보 이상의 재난대응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재난 관련 본부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

(5) 지진 관련 매뉴얼 점검 필요

- ▷ 지진 관련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을 경우 지진 발생 시 인명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므로, 매뉴얼을 점검할 것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1)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조치 필요

- ▷ 2022.11에 개소한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완공 이후 누수, 화재감지기 작동 불량 등 108건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하자로 인하여 관측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사를 담당한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관

(1)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 필요

- ▷ 사회적 대화를 위하여 일방적인 노사 법치 중심이 아닌 전제조건 없는 노사간 만남을 추진할 것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능의 핵심인 본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
- ▷ 본위원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와 노동자 사이에 있는 사람 등의 취약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

(2)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가 본래 취지대로 활동하도록 방향설정 필요

- ▷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문제, 계속고용을 위한 재채용, 직업훈련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운영할 것

